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인 쇄 2006년 12월 31일

발 행 2006년 12월 31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경제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 이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04)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72-8 93340 : ₩8000

320.911-KDC4

330.9519-DDC21

CIP2006002839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머리말	1
II. 북한 대외거래 관련 데이터의 재검토	7
1. 이용 가능한 북한의 무역 관련 데이터	12
2. KOTRA 북한무역 데이터의 재검토	17
3. 북한무역 및 관련 데이터의 재구성	25
4. 북한 관련 데이터의 이용방법	31
III.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남북교역	33
1. 대외거래 총량 규모 분석	35
2.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 :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	49
3. 북한의 대외거래 패턴과 의미: 한국 對 중국	58
IV. 남북교역과 북한경제에 대한 쟁점과 가설	65
1. 세 가지 쟁점과 여섯 가지 가설들	68
2. 중심가설 1: 경제평화론의 논리와 구성	82
3. 중심가설 2: 경제무용론의 논리와 구성	93

4. 남북교역 및 북한경제에 대한 제가설들의 논리적 연관성	110
V.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의 인과관계 검증	113
1. 예비적 논의: 교역과 평화의 인과관계 검증에 대한 일반적 토론	116
2. 검증 모형 및 방법	121
3. 검증 결과 및 토론	126
4. 검증의 한계와 의의	134
VI. 맺음말	137
참고문헌	14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1

표 목 차

<표 II-1> KOTRA와 JETRO의 북한무역통계 비교, 1996~1997	15
<표 II-2> 북한의 무역상대국 중 데이터 미취득 국가 비중 : KOTRA 통계, 1995~2000	20
<표 II-3> 북한의 곡물 수입현황, 1990~2005	22
<표 II-4> 북한의 대중국 거래 현황: KOTRA 집계, 2004~2005	24
<표 II-5>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재구성, 1990~2005	29
<표 II-6> KOTRA가 집계한 북한의 무역수지 현황, 1990~2005	30
<표 III-1> 북한의 총대외거래 현황, 1990~2005	37
<표 III-2> 북한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1993~2005	41
<표 III-3> 북한의 각국별 총거래 규모, 1990~2005	46
<표 III-4> 북한의 대외거래: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 1990~2005	50
<표 III-5>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현황, 1995~2005	56
<표 III-6> 북한의 결제성 거래 수지 현황, 1995~2005	59

<표 III-7>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61
<표 V-1>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 2000년 1월~2004년 4월	128
<표 V-2> 북한의 무역흑자 규모와 한반도 평화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131

그림 목차

<그림 III-1> 북한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1993~2005	41
<그림 IV-1> 남북교역 및 북한경제에 대한 쟁점과 가설	80
<그림 IV-2> 경제평화론의 구조	92
<그림 IV-3> 경제무용론의 구조	106
<그림 IV-4> 여섯 가지 가설의 연관 구조	112
<그림 V-1>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2000년 1월~2004년 4월	124

I

머리말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세계의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대내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과 더불어 외부적인 제재와 압박에 따른 북한경제의 붕괴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으며, 경제를 통한 평화의 추구라는 온건론의 목소리와 함께 경제를 이용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강경론의 이야기 역시 논의되는 현실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외부 관찰자들이 그러하겠지만,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모두가 제각각이다. 한편에서는 외부제재에 대항하는 북한경제의 내구력이나 폐쇄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적 압박에 따른 북한경제의 붕괴나 항복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이 어떠한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라면 이러한 변화가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압박 효과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정확히 얼마냐고 묻는다면 이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여야 할까? 또한 누군가가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한의 GDP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만일 누군가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간 한국이 추구해 온 경제를 통한 평화의 구축이라는 아이디어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묻는다면, 이에 대해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까? 물론 그간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이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북한의 GDP는 얼마이고 무역의존도는 몇 퍼센트나 되는가

하는 수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원용한 다양한 논의들 역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론하는 것도 쉽게 목도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의 주위에 산재해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수치는 모두가 제각각이고, 이에 따라 그에 근거한 논의들 역시 각자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학술적 논의와 해석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해석을 만들어 내는 ‘사실’이 다를 때에는 사정이 달라지고, 이러한 사실이 다를 때 왜 그것이 다른가를 숙고하여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하려는 모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사정이 더욱 달라진다. 이는 경제분야의 연구에서 특히 그러한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립된 사실 또는 수치에 근거해서야 비로소 논의를 출발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앞서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최근의 북한경제와 관련된 두 가지의 기본적 질문에 대해 북한경제 연구자로서 어떤 대답을 모색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그 질문이란 하나는 북한경제에 있어 대외거래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며 특히 한국과의 교역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간 한국이 남북교역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한 것이 과연 실패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물론 이 글에서 우리는 이들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나름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론 자체에는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이 글의 진정한 목표가 위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를 보다 꼼꼼하게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도달한 최종적인 결론 또는 결과가 읽는 이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거나 논쟁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결과나 결론은 이 글에서 사용하는 작업의 방법이나 절차를 조금만 수정하면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작업의 방법이나 절차가 주목과 토론의 대상이 되기를 더욱 희망한다.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위의 두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의 총산출량 및 대외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제Ⅲ장에서는 북한경제에서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영향력 전반은 물론 특히 한국과의 거래가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대외거래를 총량규모,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 무역수지의 변화라는 각각의 측면에서, 그리고 전략물자 및 자금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Ⅳ장부터는 위의 질문 가운데 ‘남북교역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증진’이라는 아이디어를 북한경제 연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Ⅳ장에서는 남북교역에 대한 제반 쟁점과 가설들을 우선 정리한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쟁점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것들은 ① 남북교역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②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의 변화 또는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③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부정적 구축효과를 갖고 있는가 등으로 집약된다. 또한 이들 쟁점들과 관련하여 각각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 또는 위협론’, ‘트로이 목마론’과 ‘양상

레짐 구원론’, 그리고 ‘개발지원론’과 ‘개발무익론’ 등의 가설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제V장에서는 앞의 제IV장에서 제시된 여러 가설들 가운데 핵심가설이라 할 수 있는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을 대신한다.

II

북한 대외거래 관련 데이터의 재검토

북한경제에서 대외거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나는 북한의 GDP 관련 데이터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무역 관련 자료이다. 예를 들어,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역총량이 GDP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북한의 GDP 관련 데이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자국의 공식적인 GDP 데이터를 외부세계에 주기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¹ 또

¹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당국은 자국의 GDP 규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해오지 않았다. 물론 1950년대 말까지 북한당국은 ‘순물질 생산(Net Material Product)’이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총산출량 통계를 발표하였다(이들 통계는 1960년대 초 북한당국이 발표한 경제통계집인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Returns of National Economy of the DPRK(1946~60)*,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1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GDP 개념과 잘 맞지 않는데다, 이마저도 1960년대 이후에는 전혀 발표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다행히 이러한 현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필요한 여러 기초통계들을 외부세계에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자국의 GDP 규모에 대한 통계 역시 포함시킨 것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98년 UNDP와 공동으로 ‘북한의 농업회복 및 식량회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자국 경제와 관련된 상당량의 기초통계를 UNDP에 제공하였는데, 이 안에 당시 북한의 달러화 표시 GDP 규모에 대한 통계 역시 포함되었다(이들 통계는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Geneva, 28~29 May 1998에서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수록된 GDP 통계는 1997년 IMF가 북한의 협조를 얻어 발간한 *Fact Finding Report*에 수록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 통계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북한 GDP를 단순한 총량 규모뿐만 아니라 그 산업별 구성내역까지 달러화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이제까지 북한당국이 발표한 총산출량 관련 통계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것이었다. 또한 북한당국은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자국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일종의 통계부록을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1999~2000년 북한의 GDP 규모가 수록되어 있다(이는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24 Jun

한 UN 등 국제사회 역시 이들 공식통계를 토대로 북한의 GDP 규모를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추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² 물론 이러한 북한의 공식통계 또는 UN 등의 추정치가 과연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법을 토대로 북한의 공식적인 GDP 데이터를 검증해 보면, 비록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데이터가 북한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왜곡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2002로 공개되었다). 이후에도 북한당국은 자국의 공식적인 GDP 규모를 지속적으로 대외기관에 제공하였는데, 예를 들어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PRK, 2006은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제출한 1997~2004년까지의 GDP와 실질성장률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그 대상기간이 짧은데다, 통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은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한의 통계당국이 직접 자국의 GDP와 관련해 발표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주4의 <참고 표>를 참조).

² 1990년대 이후 북한당국이 공식적인 GDP 규모를 외부세계에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UN통계국 역시 이러한 수치를 이용해 북한의 GDP 규모를 자체 추정·발표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UN통계국의 전자데이터베이스 <<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를 참조). 물론 UN통계국은 북한의 GDP 규모를 어떤 방법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추정치가 북한의 공식 발표치를 일정부분 이용하고 있음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1996년 이후 북한 GDP에 대한 UN통계국의 추정치는 그 총량 규모면에서 북한의 공식 발표와 매우 흡사하다. 물론 1996년 이전의 추정치는 양자가 총량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GDP의 산업별 구성 비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양자가 거의 일치한다. 이는 UN통계국 추정치가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의 공식 발표치를 토대로 이를 일정한 기준이나 가정에 의해 재구성 또는 재추정 한 것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 글에서는 북한의 공식통계와 더불어 UN통계국이 추정하는 북한의 GDP 추정치를 동시에 이용한다.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의 공식 GDP 통계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용 가능한 공식통계의 시계열이 너무 짧다는 사실인데, UN통계국 추정치는 이러한 시계열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공식통계와 일정 정도 흡사한 수치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주4의 <참고 표>를 참조).

다.³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및 그 신뢰성 문제와 관련된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북한의 공식적인 GDP 통계 및 UN 등의 추정치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다.⁴ 그런데 북한의 무역 관련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우선 북한은 현재까지 자국의 대외거래와 관련된 그 어떤 체계적인 통계도 외부세계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물론 대외거래는 그 속성상 거래 상대국이 존재하므로, 비록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거래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이렇게 파악된 북한의 대외거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³ 일반적으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통계를 검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통계의 내적인 정합성의 여부(internal consistency)를 검토하거나, 발표된 서로 다른 시계열 사이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정상훈, “북한경제연구: 일련의 방법적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5권 2호, 1989년 가을호 등을 참고). 또한 GDP와 같이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의 검증방법은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GDP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실물지표법(Physical Indicator Method)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동원하여, 이들 통계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현재까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공식 GDP 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그것이 현실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이 글에서 북한의 공식 GDP 통계와 그에 기초한 UN 등의 추정치를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이유이다.

⁴ 물론 논자에 따라서는 왜 여기에서는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치는 검토하지 않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우선 아래의 <참고 표>에서 보듯이 이들 추정치는 공식통계나 UN 추정치와는 매우 달라서 이들의 신뢰성 문제까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논의가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치는 북한의 실물 생산량에 한국의 가격체계를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실물 생산량에 그 나라의 가격체계를 적용해 산출되는 일반적인 GDP 개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논의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치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대외거래를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그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 기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이용 가능한 북한의 무역 관련 데이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제까지 북한당국은 자국의 대외거래를

<참고 표> 북한 (美 달러표시) GDP 추정치, 1990~2004

(단위: 億 달러, 달러)

	공식통계		한국은행 추정치		UN 추정치	
	GDP	1인당	GDP	1인당	GDP	1인당
1990	-	-	231	1,142	168	851
1991	-	-	229	1,115	155	778
1992	208.8	-	211	1,013	137	676
1993	209.4	991	205	969	115	561
1994	154.2	-	212	992	92	445
1995	128	-	223	1,034	54	256
1996	105.9	-	214	989	109	517
1997	-	464	177	811	105	490
1998	-	458	126	573	102	476
1999	102.7	453	158	714	104	480
2000	105.9	463	168	757	106	486
2001	-	478	157	706	110	501
2002	-	490	170	762	120	540
2003	-	524	184	818	129	581
2004	-	546	208	914	137	612

출처: 1. 공식통계: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24 Jun. 2002-a;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Geneva, 28~29 May 1998;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PRK, 2006.
2. 한국은행 추정치 및 UN 추정치: 한국은행 및 UN통계국 홈페이지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집계한 공식통계를 외부세계에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역은 그 특성상 상대국이 있기 마련이며, 이들 상대국의 무역통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무역거래 규모를 역(逆) 집계하는 일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간 다양한 연구자들이 소위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라고 불리는 거래 상대국의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무역거래 전반은 물론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 내역 역시 추적해 왔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거래 부분은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 외부세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제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⁵ 특히 1990년대 이후 이러한 노력은 더욱 체계화되어, 이제는 개별 연구자의 차원이 아닌 외부(연구)기관들 차원에서 북한의 대외거래 내역을 보다 상세히 재집계하려는 시도가 일상화 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외거래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외부기관은 크게 세 곳이 존재한다. 우선 한국의 대한무역진흥회(KOTRA)가 세계 각국의 지부에서 보고하는 북한 관련 무역 내역을 토대로 북한무역 전반에 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무역협회(JETRO) 역시 KOTRA와 유사한 방법으로 집계된 데

⁵ 이러한 시도는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anford: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를 비롯한 북한경제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 나타나지만, 이를 본격화 한 것은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 D. Thesis. Northeastern University USA, 1992; 최신림, 『북한의 무역구조』(서울: 산업연구원, 1991) 그리고 Lim Gang Taek, *North Korean Foreign Trade, 1962~1992*. Ph. D. Thesis. University of New York, 1995. 등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서구의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 as an Economy Under Multiple Severe Stresses," *Communist Economies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une 1997;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Interlocked Economic Crisis," *Asian Survey*. March 1998. 등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현재 북한경제 가운데 무역부문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신빙성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회원국들의 대한 상공업거래 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앞에서 언급한 거울통계를 이용해 북한의 무역거래를 집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공히 동일한 수치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북한무역을 재집계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공된 데이터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일 이들이 사용하는 거울통계가 각국의 상무성이나 무역위원회에서 집계하는 상업적 무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속에는 북한의 비상업적 거래 내역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북한으로의 물품 유출입 자체가 체크되는 각국 세관의 통계가 이용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상업적 무역과 비상업적 무역이 모두 포함되는 전체 거래 내역을 집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 기관이 세계 각국의 모든 무역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특정 무역상대국 또는 특정형태의 무역은 통계에서 제외된 채 집계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그 밖에도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운송비나 보험과 같은 부대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같은 기술적인 집계방법의 차이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무역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집계하는 KOTRA와 JETRO의 데이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표 II-1>은 1996~1997년간 북한의 12대 교역상대국의 대북 무역에 대한 양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 기관의 데이터는 특별한 경우 또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서

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유들을 상기해 보면 한편으로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북한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통계 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가 어떤 통계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북한의 대외거래에 대한 분석은 그 형태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 II-1> KOTRA와 JETRO의 북한무역통계 비교, 1996~1997

(단위: 천 달러)

국가	1996		1997	
	KOTRA	JETRO	KOTRA	JETRO
중국	565,667	609,130.1	656,290	698,702.5
일본	518,406	515,865.4	489,288	473,730.3
한국	-	242,419.1	-	302,313.2
인도	115,751	117,402.2	112,997	124,392.8
싱가포르	70,881	77,109.0	35,683	38,485.0
독일	74,903	74,551.9	86,176	86,520.2
러시아	64,818	53,899.5	83,830	66,621.2
홍콩	61,962	96,906.7	212,753	199,912.3
영국	37,256	40,912.6	41,343	45,334.5
네덜란드	34,241	36,960.9	28,437	22,684.3
태국	33,348	36,513.8	34,393	36,012.3
프랑스	36,476	34,612.5	41,821	41,034.6

출처: 1.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2. JETRO,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各年號.

그런데 이러한 통계 선택의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우선 IMF의 데이터를 살펴보자. 이 데이터는 특성상 북한의 상업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무역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비롯한 비상업적 무역규모가 급팽창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FAO의 집계에 따르면,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수입 가운데 국제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2000년 이후 조금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수입액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⁶ 따라서 북한의 상업적 거래에 초점을 맞추는 IMF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는 전체 북한무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KOTRA와 JETRO의 데이터 가운데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 데이터는 모두 세계 각국의 세관통계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상업적 거래 및 비상업적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언뜻 보면 JETRO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인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JETRO의 경우 KOTRA가 북한무역을 집계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KOTRA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JETRO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가지 이유는 KOTRA가 집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수가 JETRO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KOTRA가 북한의 무역을 집계하는 거래상대국의 수는 80개가 넘는 데 반해, JETRO의 경우 이 숫자는 50개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울통계를 이용해 북한의 무역현황을 재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특정 무역상대국의 거래를 빠뜨릴 수도 있는

⁶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 II-3>을 참고.

‘누락의 위험’이라는 점에서 KOTRA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안전하다는 뜻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것인데, 이는 JETRO가 2002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북한의 무역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집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JETRO는 북한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KOTRA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무역상황에 관한 KOTRA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2. KOTRA 북한무역 데이터의 재검토

이처럼 현실적으로 북한의 무역거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KOTRA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KOTRA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해 보이는 것만도 아니다.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KOTRA의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편의상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보자.

- [1] KOTRA의 북한무역 데이터에는 한국과 북한의 거래, 다시 말해 남북교역에 관한 데이터가 빠져있다. 이는 남북교역을 대외거래가 아닌 민족간의 특수거래로 간주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KOTRA의 데이터에 남

북교역을 추가해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한국은 북한과 가장 복잡한 형태의 교역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특정한 남북한의 교역은 북한과 다른 국가의 교역형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남북교역을 KOTRA의 데이터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형태를 후자에 맞게 재분류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KOTRA의 데이터는 북한의 대외거래 내역 모두를 완전히 집계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정국가와 북한의 거래나 특정 형태의 북한무역에 관해서는 KOTRA의 데이터가 이를 누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KOTRA의 데이터가 제시하는 북한무역의 규모는 실제 규모를 다분히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KOTRA의 데이터는 북한의 비상업적 거래,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와 같은 이전 거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가 다소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대북무상원조는 명시적으로 KOTRA의 데이터에 나타나지만, 다른 국가의 유사한 원조내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KOTRA의 데이터를 이용해 북한의 대외거래를 파악하는 경우 이러한 비상업적 거래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KOTRA의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무역수지를 단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KOTRA의 데이터에 나타나는 북한의 총수출액에서 총수

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북한 무역수지를 계산하는 경우, 그 총수입 속에는 해외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무상원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의 순수한 무역수지, 다시 말해 북한당국이 보유하는 경화의 감소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래의 규모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1]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KOTRA의 데이터는 북한 대외거래의 약 20~25% 정도를 점하는 한국과의 교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무역거래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남북교역 관련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교역은 북한의 여타 대외거래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실제로 한국과 북한은 적어도 네 가지 형태의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일반적인 상업적 거래 ②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같이 상업적인 거래이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자금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③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또는 원조 ④ 한국의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적인 대북지원 또는 원조 등이 그것이다. 또한 대북 쌀 지원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차관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상지원에 가까운 거래형태도 존재한다. 문제는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거래는 이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집계하는 KOTRA의 데이터에 남북교역 관련 데이터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후자의 형태를 전자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KOTRA의 데이터에 남북교역을 성공적으로 삽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2]에서 말하고 있듯이, 설사 KOTRA의 데이터에 남북교역을 성공적으로 더한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북한 대외거래의

실질적인 총계를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미 언급했듯이, 거울통계를 이용해 북한의 무역을 재구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통계의 ‘누락 가능성’이다. 그런데 <표 II-2>에서 보듯이 KOTRA가 북한무역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거래상대국 통계를 모두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5~2000년 KOTRA가 관련 통계를 입수를 의도했던 북한의 거래상대국 가운데 10~23% 국가에서는 관련 통계를 아예 획득하지 못했거나 또는 획득한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북한무역을 집계하는 근거 데이터로는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II-2> 북한의 무역상대국 중 데이터 미취득 국가 비중
: KOTRA 통계, 1995~20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 조사국가 (A)	97	97	97	97	97	97
데이터 미취득 국가 (B)	14	6	3	13	18	18
(B)/(A) (%)	14.43	6.19	3.09	13.40	18.56	18.56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그렇다면 KOTRA가 정상적으로 입수하여 북한의 대외거래 집계에 이용한 각국의 통계자료는 과연 북한과의 무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특히 중국 등 주변국과의 무역은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공식 무역은 관련국들의 세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 관련국들의 공식적인 대북무역 통계는 실제적인 무역 규모를 구조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계의 누락 가능성 또는 그 누락의 폭이 예상외로 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표 II-3>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 표에 따르면, 1998~2005년간 북한의 곡물 수입량에 대한 KOTRA의 집계액은 동일한 항목에 대한 FAO의 집계액의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FAO의 집계에는 KOTRA가 집계하지 않는 한국의 대북곡물지원 수량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KOTRA의 집계 수량은 FAO의 집계 수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KOTRA가 집계한 북한무역 데이터는, 아니 여기에 남북교역을 삽입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실제 무역 규모를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3> 북한의 곡물 수입현황, 1990~2005

[A] KOTRA 집계현황

(단위: 만 톤)

연도	중국	러시아	태국	캐나다	일본	EU	기타	합계
1991	30	-	9	35	-	-	55	129
1992	62	-	2	8	-	-	11	83
1993	74	-	7.8	16	-	-	11.5	109.3
1994	30.5	-	5.2	-	-	-	13.3	49
1995	15.3	-	16.2	-	37	-	27.7	96.2
1996	54.7	14	3	-	13.2	-	20.1	105
1997	86.7	3.4	3.8	-	-	11.5	57.6	163
1998	28.8	10.4	-	-	5.9	8.2	57.9	111.2
1999	23.8	6.1	-	-	-	2	75.1	107
2000	28.3	-	28.4	-	10.6	4	51.2	122.5
2001	43.6	0.5	-	-	50	2.2	43.7	140
2002	21.9	-	20	-	-	-	58.6	100.5
2003	34.9	-	9.5	5.1	-	1	30.4	80.9
2004	9.0**	-	18.4	-	-	0.3	30.4	58.1
2005	32.7	-	10	1.4	-	1.5	40.4	86

[B]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집계현황

(단위: 만 톤)

	총 곡물수입	그 중 곡물원조
1990	60	0
1991	157	0
1992	115	0
1993	159	0
1994	57	8
1995	101	73
1996	111	51
1997	147	83
1998	151	104
1999	119	89
2000	230	154
2001	205	107
2002	183	97
2003	173	84
2004	171	na

출처: 1.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2. FAO 통계 데이터베이스.

다음으로 위의 [3]에 대해 생각해 보자. <표 II-4>는 KOTRA가 이용하는 북한의 중국무역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데이터에는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의 대북거래 총액은 이 무상원조를 포함하는 값으로 정의되어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비단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거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KOTRA가 이용하는 북한의 대미국 거래에서는 이러한 비상업적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인도적 식량지원과 KEDO용 중유지원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대해 연평균 1억 달러의 무상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북한과의 상업적 거래액의 20배를 능가하는 규모이다.⁷ 그러나 KOTRA가 파악하는 북한과 미국의 거래에는 이러한 비상업적 거래내역이 빠져있다. 물론 이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위와 같은 미국의 대북지원은,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전달된 것이 아니고 WFP나 KEDO와 같은 국제기구 또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OTRA가 집계하는 북한의 무역 속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미국의 세관에 의해 기록된 미국의 대북거래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WFP나 KEDO와 같은 조직이 해당 물품을 구매 또는 선적하는 국가의 세관에 의해 기록된 그 국가의 대북거래로 파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KOTRA의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대외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과 같이 상업적 거래내역과 비상업적 거래 내역이 모두 명시적

⁷ 이에 대해서는 Manyin and Jun,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RL3178*, March 2003을 참고.

으로 표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양자의 합으로 총거래 내역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미국과 같이 비상업적 거래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국가가 WFP나 KEDO와 같은 국제기구 등에 제공한 대북지원 내역 등을 따로 파악하여 이를 KOTRA의 데이터에 합산하여야 비로소 총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반대로 WFP나 KEDO와 같은 국제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대북지원이 자국의 세관을 거쳐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대북거래의 규모가 부풀려진 국가의 경우에는 이를 총거래에서 차감하여야 비로소 올바른 거래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II-4> 북한의 대중국 거래 현황: KOTRA 집계, 2004~2005

(단위: 천 달러)

	북한의 대중 수출		북한의 대중 수입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일반무역	75,000	147,845	566,243	678,466
무상원조	26	0	14,556	38,123
위탁가공무역	8,317	7,091	4,481	15,555
원자재조달가공무역	13,367	13,850	30,683	36,078
변경무역	156,384	181,932	143,656	259,479
계	253,094	350,718	759,619	1,027,701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이러한 이유로 인해 [4]에서 말하고 있듯이 북한의 무역수지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KOTRA의 데이터는 북한에 대한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무상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OTRA의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차감하는 경우 이것이 북한의 순수한 무역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총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북한이 경화로 그 대금을 지급해도 되지 않는 일종의 무상원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OTRA의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순수한 무역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등 지원규모를 다시 한 번 차감해야 하는 것이다.

3. 북한무역 및 관련 데이터의 재구성

이처럼 KOTRA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한의 대외거래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KOTRA의 데이터를 재구성한다.

우선 한국의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남북간 교역통계를 KOTRA의 데이터에 삽입하여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 내역을 파악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복잡한 남북교역의 형태를 어떻게 다른 나라의 경우와 일치하게끔 재조정하는가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이를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즉 남북교역을 양국간의 무역자금 결제가 필요한 결제성 거래와 그렇지 않은 비결제성 거래로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간의 일반교역이나 위탁가공교역과 같은 상업적 거래는 물품의 수출입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자금의 대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제행위가 발생한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수지상의 무역거래 또는 상품거래로 구분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를 결제성 거래로 분류하기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협력 등 일체의 비상업적 지원성 거래는 비결제성 거래로 분류된다. 이들 거래는 국제수지상의 무역거래가 아니라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거래이다. 이들 거래는 그 성격상 상업적인 목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결제하기 위한 남북간의 자금의 결제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특성 또한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들 거래는 국제수지상의 무역거래가 아니라 ‘현물로 이루어지는 자본투자 또는 자본거래’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옳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이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같은 거래 역시 자금의 결제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비결제성 거래로 분류한다.

KOTRA가 집계하는 해외 국가들의 대북무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제성 거래(상업적 무역거래)와 비결제성 거래(비상업적 이전거래: 무상원조)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현물로 이루어지는 대북 자본투자’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같은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의 결제성 거래는 곧 상업적인 거래를, 그리고 비결제성 거래는 곧 비상업적인 거래를 의미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과 같은 경우는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가 해당 국가의 대북거래 내역에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① 중국과 같은 경우는 KOTRA가 집계한 해당 국가의 통계를 이용하여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를 구분하지만, ② 미국과 같은 경우는

KOTRA가 집계한 해당 국가의 통계에 별도로 수집한 해당 국가의 비결제성 대북거래 내역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총거래 내역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 세계 각국의 북한에 대한 비결제성 거래 내역 각각을 모두 집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비결제성 거래는 인도적 지원과 KEDO용 지원 두 가지 형태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양자 모두는 WFP와 같은 국제기구와 KEDO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집계 되고 있다.⁸ 여기에서는 한국과 중국 이외 국가가 수행하는 북한과의 비상업적 또는 비결제성 거래내역을 이러한 국제기구 등의 집계 통계 등을 이용하여 조정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대북거래를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로 양분하게 되면, 이를 통한 북한의 (순수) 무역수지를 계산하는 일이 매우 편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우선 KOTRA의 통계에 남북한 교역 통계를 삽입한 후, 북한의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더하면 이는 곧 북한으로부터의 총물품 반출입 차(差)를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반출입 차에 북한에 대한 비결제성 거래(이전거래), 즉 각국의 지원총액을 다시 차감하면, 이것이 바로 북한의 순수 무역수지 규모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글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역수지와 관련된 세 가지의 수치를 도출할 것인데, 그것은 ① 북한의 총물품 거래를 반영하는 반출입 차, ② 북한의 결제성 무역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순수) 무역수지, ③ 북한이 해외로부터 대가없이 (비결제성 거래로) 제공받는 지

⁸ 물론 이외에도 미국이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과 같은 명목으로 북한에 일종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 행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북한과의 물품 수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상거래가 아니라, 직접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자본거래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의 경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자본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원의 규모 등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수치가 분명해질 때, 비로소 북한의 대외무역 특징이나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적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5>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1990~2005년간 북한의 대외 거래 내역을 재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를 KOTRA가 제시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 <표 II-6>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무역은 총량 규모면에서 KOTRA가 제시하는 숫자 보다는 크지만, (순수) 무역수지면에서는 KOTRA의 통계 수치보다도 적고, 그 이유는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상당부분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즉 이전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 II-5>가 KOTRA의 통계에 남북한 교역통계를 더하고, 이 모두를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로 구분하여 북한의 무역수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표 II-5>의 결과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앞서 우리는 KOTRA의 통계가 북한의 실제 무역 규모를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료의 수집에서 커다란 제약을 받는 개별 연구자들이 이러한 KOTRA 통계의 ‘데이터 누락 가능성’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KOTRA 통계를 기초로 재구성된 <표 II-5>의 결과를 ‘북한무역에 대한 합리적인 집계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소 가능치’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실제로는 <표 II-5>에서 제시된 규모보다도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표 II-5>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재구성, 1990~2005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총계	1,745	1,051	1,096	1,168	1,035	959	909	1,098	652	637	709	826	1,008	1,066	1,278	1,339
	1. 한국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결제성 거래)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0	92	121	151	173	270	289	258	320
	(비결제성 거래)	0	0	0	0	0	0	0	3	0	0	2	3	1	0	0	20
	2. 중국	125	86	155	297	199	64	69	122	57	42	37	167	271	396	586	499
	3. 기타 국가	1,608	859	778	692	659	672	658	783	502	473	519	483	465	381	434	499
수입	총계	2,438	1,645	1,633	1,664	1,260	1,380	1,319	1,388	1,013	1,176	1,686	1,847	1,894	2,049	2,276	2,719
	1. 한국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결제성 거래)	1	6	11	8	18	53	55	60	52	68	89	63	73	120	89	99
	(비결제성 거래)	0	0	0	0	0	11	14	55	78	144	184	164	297	315	350	616
	2. 중국	358	525	541	602	425	486	497	535	356	329	451	573	467	628	800	1,081
	(결제성 거래)	358	525	541	602	425	486	497	500	324	280	423	504	451	617	785	1,043
	(비결제성 거래)	0	0	0	0	0	0	0	34	32	48	28	69	16	11	15	38
	3. 기타 국가	2,079	1,114	1,081	1,053	817	830	753	738	527	636	962	1,047	1,057	986	1,037	922
	(결제성 거래)	2,079	1,114	1,081	1,053	817	811	701	547	263	383	622	637	673	775	862	877
	(인도적 지원)	0	0	0	0	0	4	27	168	216	190	153	248	220	133	152	45
(KEDO 지원)	0	0	0	0	0	15	25	23	48	63	187	162	163	78	24	0	
무역 총계	총계	4,183	2,695	2,728	2,832	2,295	2,339	2,228	2,485	1,664	1,813	2,395	2,673	2,902	3,116	3,554	4,057
	1. 결제성 거래	4,183	2,695	2,728	2,832	2,295	2,309	2,162	2,202	1,290	1,367	1,842	2,028	2,204	2,578	3,015	3,338
	2. 비결제성 거래	0	0	0	0	0	30	66	283	374	446	553	646	698	538	540	720
	3. 비결제성 거래비율(%)	0.00	0.00	0.00	0.00	0.00	1.28	2.98	11.39	22.50	24.60	23.10	24.15	24.06	17.25	15.18	17.74
무역 수지 적자	순무역수지적자	-693	-594	-537	-496	-225	-392	-344	-12	13	-94	-428	-380	-191	-446	-458	-701
	1. 총거래차	-693	-594	-537	-496	-225	-421	-410	-290	-361	-540	-977	-1,021	-886	-983	-998	-1,380
	2. 비결제성 거래차	0	0	0	0	0	-30	-66	-277	-374	-446	-549	-640	-695	-537	-539	-679

주: 1. 한국의 결제성 거래는 '일반 거래+위탁가공 거래'로 정의
 2. 한국의 비결제성 거래는 위의 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로 정의
 (즉 '자금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
 3. 기타 국가의 인도적 지원 중 1997년 3월까지의 지원은 기간별 지원액을
 월간으로 균등분할하고, 이를 다시 Calendar Year에 맞추어 배분하는 방
 식으로 계산(↙)

- (ㄴ)
4. 기타 국가의 KEDO지원은 경수로 건설 관련 지원과 중유제공을 모두 포함하나, 이 가운데 한국의 지원분은 제외 (한국의 지원분은 한국의 비결제성 거래에 포함 되므로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함)
 5.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 총거래차는 '북한으로부터 반출된 총재화의 가치에서 반입된 총재화의 가치를 차감'한 값을 의미
 6.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 비결제성 거래차는 인도적 지원이나 중국의 무상원조 한국의 경험과 같이 북한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반입한 재화의 총가치를 의미
 7. 순무역수지 적자는 '총거래차-비결제성 거래차'로 정의 (이는 북한이 대외 무역에서 실제로 화폐적 적자를 기록한 것을 의미)
- 출처: 1. 한국의 대북거래는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 DB.
 2. 한국 이외의 대북거래는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3. 인도적 대북지원은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Database.
 4. KEDO의 지원액은 KEDO, Annual Report, Various Years.

<표 II-6> KOTRA가 집계한 북한의 무역수지 현황, 1990~2005

(단위: 천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0	1,733	2,437	-704
1991	945	1,639	-694
1992	933	1,622	-689
1993	990	1,656	-666
1994	858	1,242	-383
1995	736	1,316	-580
1996	727	1,250	-523
1997	905	1,272	-368
1998	559	883	-324
1999	515	965	-450
2000	556	1,413	-857
2001	650	1,620	-970
2002	736	1,524	-788
2003	777	1,614	-837
2004	1,020	1,837	-817
2005	998	2,003	-1,005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4. 북한 관련 데이터의 이용방법

이 장에서 우리는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북한의 GDP 및 대외무역 관련 데이터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북한의 GDP 규모에 관한 공식통계나 UN통계국의 추정치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북한 대외무역의 경우에는 KOTRA가 제시하는 통계와 남북경협 통계를 적절히 혼합하여 그 규모와 내역을 파악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① 북한 GDP의 경우에는 주로 공식통계 및 그에 기반한 추정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들 통계가 북한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와 관련된 의구심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다는 점과 ② 북한무역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아무리 거울통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질적인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를 보다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북한의 대외거래를 추정하는 경우 그 결과는 언제나 현실을 일정부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말이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북한의 대외거래를 논의하는 경우 그 근거 데이터로 이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된 데이터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실제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III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남북교역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GDP 및 무역 관련 데이터들을 평가하고 그것들의 사용방법을 확정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확정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적 성격과 이에 대한 한국경제의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북한의 대외거래를 총량 규모면에서 논의함으로써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확정한 이후, 이러한 그림이 북한 대외거래의 세부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경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대외거래 총량 규모 분석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 정도를 살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북한의 GDP에서 총대외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대외거래는 재화의 이동을 의미하는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투자와 같이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거래에 관해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 규모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외거래를 경상거래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북한의 대외거래를 경상거래로 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은 크게 재화의 상업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무역거래와 그것의 비상업적인 이동을 말하는 이전거래로 양분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업적인 거래와 비상업적인 거래를 몇 가지의 기술적인 이유에서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경상거래는 곧 앞장의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를 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념적으로 경상거래 안에는 이와 같은 거래들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이동을 의미하는 서비스 거래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거래 역시 현재 관련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경제의 특성상 그 절대적 규모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외거래를 앞서 말한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의 합계로만 살펴보도록 한다.

가.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와 GDP

<표 III-1>은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와 GDP 규모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의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의 대외거래는 크게 보아 ‘U자형’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줄곧 대외거래 규모가 감소하다가,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을 반환점으로 하여서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이에 따라 2005년의 경우에는 과거 1990년대 초반 수준의 대외거래 규모를 회복하는 것이다.

<표 III-1> 북한의 총대외거래 현황, 1990~2005

(단위: 백만 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대외거래	수출 또는 반출(A)	1,745	1,051	1,096	1,168	1,035	959	909	1,098
	수입 또는 반입(B)	2,438	1,645	1,633	1,664	1,260	1,380	1,319	1,388
	총거래 규모(C)	4,183	2,695	2,728	2,832	2,295	2,339	2,228	2,485
	총 거래차(D)=(A)-(B)	-693	-594	-537	-496	-225	-421	-410	-290
북한 GDP	UN 추정치(E)	16,752	15,523	13,656	11,473	9,213	5,357	10,927	10,456
대외 의존도 (%)	(A)/(E)	10.42	6.77	8.02	10.18	11.23	17.90	8.32	10.50
	(B)/(E)	14.55	10.59	11.95	14.50	13.68	25.77	12.07	13.27
	(C)/(E)	24.97	17.36	19.98	24.68	24.91	43.67	20.39	23.77
	(D)/(E)	-4.14	-3.83	-3.93	-4.32	-2.45	-7.87	-3.75	-2.7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외거래	수출 또는 반출(A)	652	637	709	826	1,008	1,066	1,278	1,339
	수입 또는 반입(B)	1,013	1,176	1,686	1,847	1,894	2,049	2,276	2,719
	총거래 규모(C)	1,664	1,813	2,395	2,673	2,902	3,116	3,554	4,057
	총 거래차(D)=(A)-(B)	-361	-540	-977	-1,021	-886	-983	-998	-1,380
북한 GDP	UN 추정치(E)	10,241	10,425	10,635	11,026	11,967	12,932	13,699	NA
대외 의존도 (%)	(A)/(E)	6.36	6.11	6.66	7.49	8.42	8.25	9.33	NA
	(B)/(E)	9.89	11.28	15.85	16.75	15.83	15.85	16.61	NA
	(C)/(E)	16.25	17.39	22.52	24.25	24.25	24.09	25.94	NA
	(D)/(E)	-3.52	-5.18	-9.19	-9.26	-7.41	-7.60	-7.28	NA

출처: <표 II-5>와 동일

실제로 북한의 총대외거래액은 1990년 41억 달러에서 1998년 16억 달러로 거의 1/3수분으로 급락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인 상승추세로 반전되어 2005년에는 4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외거래를 수출(또는 반출)과 수입(또는 반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추세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게 관찰된다. 먼저 수입의 경우 1990년 25억 달러에 달하던 것이 1998년에는 10억 달러 내외로 절반 이상 하락하였으나, 그 후 증가세로 돌아서 2005년에는 27억 달러로 1990년의 수준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회복세가 상

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17억 달러에 달하던 수출액이 1999년에는 7억 달러로 급락하고,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기는 하였으나, 그 상승폭은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2005년의 경우에도 여전히 1990년의 수준을 밑도는 13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GDP 추세 역시 앞의 ‘U자형’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GDP는 1990년 167억 달러에서 1990년대 중후반에는 53~105억 달러 내외까지 떨어졌고, 그 후에는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4년의 경우 137억 달러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한편으로는 1990~2005년간 북한의 모든 실물경제변수가 ‘하락 → 반전 → 회복’의 U자형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북한의 GDP에 대해 대외거래가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먼저 1990~2005년간 북한의 GDP에서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의 GDP에서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와 같은 전형적인 U자형의 패턴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비율의 추세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 비율은 1990년 25% 내외로 출발하였으나, 1991~2000년 사이에는 최저 16%에서 최고 44% 정도로 연도에 따라 극심한 편차를 보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다시 25% 내외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북한경제가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위기의 조짐을 보이면서 2000년 부근까지 극심한

혼란상태를 겪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91~2000년 사이 북한의 GDP 대비 대외거래의 비중이 극심한 변동을 보인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수치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 북한의 GDP 대비 대외거래의 비중은 약 25% 내외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당연할 것이다. 2000년 이후 북한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이 비중이 약 25%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수치는 북한이 경제위기에 돌입하기 이전인 1990년의 수치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는 북한의 GDP 대비 대외거래의 비중이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는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GDP 대비 대외거래의 비중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약 25% 내외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다만 이러한 비중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 동안에는 매우 불안정하고 편차가 컸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GDP 대비 25% 정도의 대외거래 비중을 가지고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을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과거 북한의 무역패턴을 연구했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한의 GDP에서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외로 낮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의 경우에는 1960~1980년대의 경우 이 비율이 20~25% 내외로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1970년대 이전 중국의 대외거래 비중이 GDP 대비 10% 내외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북한경제에서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는 것이

⁹ 예를 들어,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pp. 253~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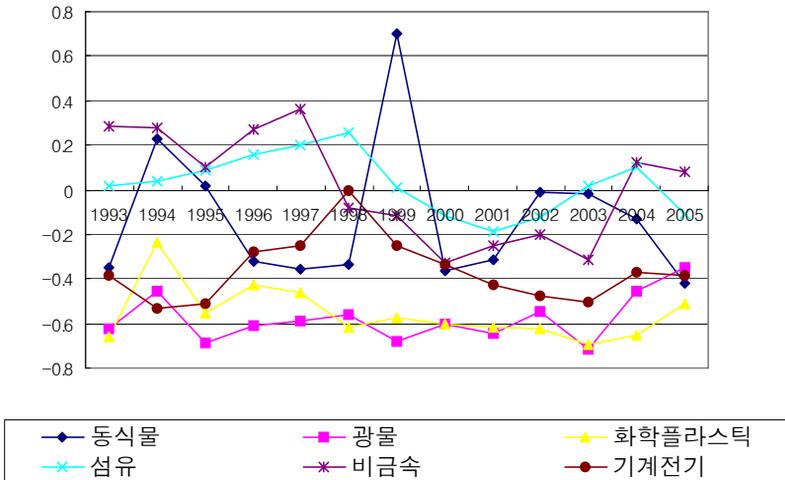
다. 실제로 과거 북한경제의 구조를 상기하면 이처럼 높은 대외 거래 비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수도 있다. 북한은 중국이나 여타 아시아의 사회주의 경제와는 달리 인구의 약 60%가 산업부문에 종사하던 공업화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체의 경제기술적 특성상 이처럼 공업화된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상당량의 물자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¹⁰ 석유나 코크스탄과 같은 원재료에서부터 고급 기술이나 기계류의 부품과 같은 산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북한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기초 물자들이 거의 대외거래를 통해 입수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위에서처럼 현재 북한의 GDP 대비 대외거래 비중을 25% 내외로 파악하는 경우, 이 수치는 과거 북한경제에서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의 수치들을 표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북한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대외거래가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되면서 그 비중은 과거와 같은 정도로 회귀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대외의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수치상 현재의 북한경제 역시 대외의존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¹⁰ 이러한 사실은 1945년 이후 북한이 단 한 차례도 무역수지 흑자나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수입적자국이었던 사실과 이러한 수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당량의 원조를 구(舊)소련과 동구권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받아들였다는 사실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198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무역의 일반적 특성과 추이에 관해서는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 D. Thesis. Northeastern University USA, 1992가 특히 주목할 만하며, 과거 북한의 해외원조와 관련해서는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서울: 국토통일원, 1996) 집계 관련 데이터를 참고.

<표 III-2> 북한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1993~2005

	동식물	광물	화학플라스틱	섬유	비금속	기계전기
1993	-0.34661	-0.62252	-0.66168	0.017044	0.288379	-0.38565
1994	0.232353	-0.45328	-0.23918	0.036049	0.275807	-0.53249
1995	0.015223	-0.69024	-0.5531	0.084641	0.099805	-0.51235
1996	-0.32152	-0.60896	-0.42921	0.162065	0.268373	-0.27673
1997	-0.35899	-0.5893	-0.46154	0.203013	0.360693	-0.25026
1998	-0.3357	-0.55927	-0.61934	0.254156	-0.08301	-0.00488
1999	0.698981	-0.68235	-0.57356	0.01369	-0.11876	-0.25034
2000	-0.36391	-0.605	-0.60109	-0.11369	-0.3284	-0.33242
2001	-0.31513	-0.64155	-0.61878	-0.18399	-0.24975	-0.42697
2002	-0.01105	-0.54355	-0.62724	-0.12566	-0.20388	-0.47319
2003	-0.01937	-0.7178	-0.69779	0.019171	-0.31642	-0.50402
2004	-0.13007	-0.45791	-0.6528	0.104314	0.122693	-0.36706
2005	-0.41748	-0.34684	-0.50946	-0.10808	0.079022	-0.3862

<그림 III-1> 북한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1993~2005



나. 대외거래 수지적자와 무역특화지수

위와 같은 질문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나타나는 수지적자 규모의 추세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1990~2005년 북한의 대외거래 적자 규모 역시 앞서의 경제변수들과 마찬가지로 U자형의 추세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 우선 1990년 북한의 대외거래 적자 규모는 약 7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러한 규모는 경제위기를 맞아 대외거래 자체가 축소됨으로써 1990년대 후반에는 3억 달러 내외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그 규모는 다시 급속히 늘어나 2001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5년에는 1990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4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현재 북한이 대외거래에서 부담하는 적자액의 규모는 과거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대외거래 적자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비율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오르내림을 반복하였지만, 그래도 특수하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략 2~4%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경제가 상대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점프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7~9%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약 2~3배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경제가 대외거래에서 부담하는 적자액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추세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표 III-2>와 <그림 III-1>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1990~2005년간 북한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역특화지수란 각 산업이 과연 어느 정도 수출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이 지수는 통상 각 산업에서의 $(\text{수출액} - \text{수입액}) / (\text{수출액} + \text{수입액})$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1일 경우에는 완전히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대로 -1일 경우에는 완전히 수입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치가 0일 경우에는 수출입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무역특화지수가 각 산업별로 (+)에서부터 (-)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어느 나라이건 무역이 발생하는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과 비교열위가 있는 산업이 동시에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출에 특화되는 산업과 수입에 특화되는 산업 역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해서 상대적으로 동식물이나 비금속 같은 북한의 1차 산업은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던 반면, 기계류 같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2000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북한의 여러 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에 특화되는 부문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00~2002년간 북한의 산업 가운데 무역특화지수가 0보다 큰 산업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3~2005년에는 섬유나 비금속 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역시도 0에 매우 가까워

수출입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옳을 것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사실상 북한의 전 산업분야가 수입초과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여전히 1990년대 경제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의 전 산업분야가 물자부족에 시달려 스스로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수입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북한의 대외거래적자 확대 추세가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북한경제는 스스로의 내부 동력에만 의존해서는 경제의 유지·발전 자체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현재 북한의 대외거래 의존도가 그 수치상 과거와 유사한 GDP 대비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이다.

다. 대외거래 상대국의 변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 상대방으로 살펴본 북한 대외거래의 특징이다. <표 III-3>은 1990~2005년 북한의 각국별 대외거래 총액과 그 구성비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 북한의 대외거래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¹ 물론 중국과 일본과 같은 북한

¹¹ 물론 1980년대까지 북한의 무역은 당시의 소련에 크게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붕괴로 북한의 대소련 무역이 종래의 1/10로 줄어들면서 북한의 무역상대국은 세계 여러 나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거래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의 비중을 합쳐도 전체의 23% 정도에 불과해 북한이 특정국가와의 대외거래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북한이 극심한 경화부족에 시달리면서 경화결제에 요구되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과의 북한의 거래비중은 1990년 전체 대외거래의 77%에서 2005년에는 30%로 급락하게 된다. 북한의 대외거래가 사실상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몇 개국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과 일본과의 거래이다. 일본은 북한이 대외거래에서 수지흑자를 기록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의 하나이며, 이러한 일본과의 거래는 1990년대 중후반 북한 전체 대외거래의 24%를 점유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여 가장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어패류 등이었으며, 이러한 어패류 등의 최대 수입국이 일본이라는 점에서 대일 무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의 성격과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일무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로 들어섰으며, 2003년을 기점으로 급락세를 보이더니, 2005년에는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들어 불거진 북한 핵문제와 북한당국의 일본인 납치 사건 등으로 인해 일본이 북한과의 무역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표 III-3> 북한의 각국별 총거래 규모, 1990~2005

[A] 금액

(단위: 천 달러)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전체
1990	13,466	482,740	476,582	3,210,691	4,183,479
1991	111,266	610,450	507,567	1,465,124	2,694,407
1992	173,426	696,570	480,287	1,378,172	2,728,455
1993	186,592	899,640	472,005	1,273,759	2,831,996
1994	194,547	623,740	493,464	983,240	2,294,991
1995	287,291	549,793	594,637	907,491	2,339,212
1996	252,039	565,667	518,406	892,219	2,228,331
1997	308,339	656,290	489,288	1,031,276	2,485,193
1998	221,943	413,018	394,626	634,550	1,664,137
1999	333,436	370,369	350,403	758,775	1,812,983
2000	425,148	488,038	463,651	1,017,848	2,394,685
2001	402,957	617,551	474,695	1,178,253	2,673,456
2002	641,730	738,172	369,541	1,152,675	2,902,118
2003	724,217	1,022,927	265,318	1,103,130	3,115,592
2004	697,040	1,380,206	252,634	1,224,271	3,554,151
2005	1,055,753	1,580,341	193,619	1,227,718	4,057,431

[B] 구성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전체
1990	0.32	11.54	11.39	76.75	100
1991	4.13	22.66	18.84	54.38	100
1992	6.36	22.66	18.84	54.38	100
1993	6.84	31.77	16.67	44.98	100
1994	8.48	27.18	21.50	42.84	100
1995	12.28	23.50	25.42	38.79	100
1996	11.31	25.39	23.26	40.04	100
1997	12.41	26.41	19.69	41.50	100
1998	13.34	24.82	23.71	38.13	100
1999	18.39	20.43	19.33	41.85	100
2000	17.75	20.38	19.36	42.50	100
2001	15.07	23.10	17.76	44.07	100
2002	22.11	25.44	12.73	39.72	100
2003	23.24	32.83	8.52	35.41	100
2004	19.61	38.83	7.11	34.45	100
2005	26.02	38.95	4.77	30.26	100

출처: <표 II-5>와 동일

이처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북한의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북한의 대외거래 패턴 역시 한국과 중국이라는 단 두 나라에만 더욱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1990년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11%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3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북한의 대외거래 가운데 거의 40%에 가까운 물량이 중국과의 거래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국과 북한의 거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북한과의 거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도 한국과의 거래는 1990년의 경우 전체 대외거래의 0.3%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10%대를 훌쩍 뛰어넘더니,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부터는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큰 규모로 발전한다. 2005년의 경우 북한의 북한 對 한국 거래는 북한 전체 대외거래의 26%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거래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거래를 합치면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북한경제는 사실상 이 두 나라와의 대외거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닌 셈이다.

라.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대외거래를 총량 규모라는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는 GDP 대비 약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이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1990년대 중후반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북한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상태를 유지했던 1990년대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매우 흡사한 수치이다. 따라서 GDP 대비 대외거래 규모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현재의 북한경제가 과거보다 특별히 대외 의존적으로 변모했다고 말할 수 없다. 둘째, 그러나 북한이 대외 거래에서 부담하는 수치적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북한의 대외거래 적자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어나 2000년대 들어서는 GDP 대비 7~9% 수준까지 상승한다. 더욱이 이러한 적자 기조는 북한의 특정 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산업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의 적자확대 추세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전 산업이 현재 해외로부터의 물자조달이 없으면 스스로의 유지·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셋째, 북한의 대외거래 구조 역시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에만 지극히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의 경우 이 두 나라와의 거래가 북한 전체 대외거래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따라서 비록 GDP 대비 대외거래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적 성격이 199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대외거래의 상대방이나 수치변화라는 구조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적 성격이 1990년대 이후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

우리는 앞에서 2000년 이후 북한은 GDP의 7~9% 정도에 이르는 대외거래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러한 수치는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북한은 1970년대 이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종의 채무지불 불능 선언을 한 국가이고, 1990년대 중후반에는 수십만의 아사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화, 즉 달러가 부족한 나라인데, 어떻게 GDP의 7~9%에 이르는 대외거래 적자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북한의 대외거래에는 북한이 실제로 지불을 결제해야 하는 결제성 거래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요가 없는 경제적 원조나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결제성 거래 역시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비상업적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실제로 북한이 지불부담을 지고 있는 대외거래 적자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바로 동일한 이유에서 앞서 우리가 언급한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실제로는 북한경제의 ‘원조(또는 지원)’의 의존성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북한경제는 현재 과연 얼마만큼이나 해외로부터의 원조 또는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¹²

¹²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북한의 대외거래를 상업적인 거래와 비상업적인 거래로 양분하여 후자의 비중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비상업적인 대북거래의 경우 북한이 실질적인 결제부담을 지지않는 원조적 성격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한국 이외의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이해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문의 제Ⅱ장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북한의 거래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 그 가운데 ‘북한이 지불부담을 지지않는’ 상업적인 거래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표 III-4> 북한의 대외거래: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 1990~2005

(단위: 백만 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 거래규모	총 거래규모-(A)	4,183	2,695	2,728	2,832	2,295	2,339	2,228	2,485
	그 중 결제성 거래-(B)	4,183	2,695	2,728	2,832	2,295	2,309	2,162	2,202
	비결제성 거래-(C)	0	0	0	0	0	30	66	283
2. 무역수지	총 거래차-(D)	-693	-594	-537	-496	-225	-421	-410	-290
	그 중 결제성 거래차-(E)	-693	-594	-537	-496	-225	-392	-344	-12
	비결제성 거래차-(F)	0	0	0	0	0	-30	-66	-277
3. 북한 GDP	UN 추정치(G)	16,752	15,523	13,656	11,473	9,213	5,357	10,927	10,456
4. GDP 대비 비중 (거래규모) (%)	(A)/(G)	24.97	17.36	19.98	24.68	24.91	43.67	20.39	23.77
	(B)/(G)	24.97	17.36	19.98	24.68	24.91	43.11	19.79	21.06
	(C)/(G)	0.00	0.00	0.00	0.00	0.00	0.56	0.61	2.71
5. GDP 대비 비중 (무역수지) (%)	(D)/(G)	-4.14	-3.83	-3.93	-4.32	-2.45	-7.87	-3.75	-2.77
	(E)/(G)	-4.14	-3.83	-3.93	-4.32	-2.45	-7.31	-3.15	-0.12
	(F)/(G)	0.00	0.00	0.00	0.00	0.00	-0.56	-0.61	-2.65

한국에서 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반출된 물자는 북한의 한국과의 총거래에서 수지적자의 요인으로 잡히고, 또한 다른 형태로 수입된 물자와 동일하게 북한의 GDP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물자 반출은 한국기업 및 개인의 이윤 동기에서 이루어진 상업적인 물자 반출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다른 제품을 수입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물자의 반입에는 지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물자의 반입이 크게 늘어서 한국과의 물자 반출입 차가 아무리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결제부담을 지는 반출입 차 또는 수지적자의 규모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일 앞서와 같은 북한경제의 원조의존성에 대한 질문을 좁고 엄밀하게 해석하여 경제적으로 순수한 원조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거래형태는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앞의 질문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북한이 지불부담을 지지않고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거래형태는 당연히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후자의 입장을 선택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거래형태를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들의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 않고 그 추세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서 보듯이 이러한 거래형태가 이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대외거래 형태를 기존의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불부담이 발생하는 결제성 거래와 지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비결제성 거래로 양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본문의 제II장에서 북한의 거래를 상업적인 거래와 비상업적인 거래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로 구분한 것이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거래규모	총 거래규모-(A)	1,664	1,813	2,395	2,673	2,902	3,116	3,554	4,057
	그 중 결제성 거래-(B)	1,290	1,367	1,842	2,028	2,204	2,578	3,015	3,338
	비결제성 거래-(C)	374	446	553	646	698	538	540	720
2. 무역수지	총 거래차-(D)	-361	-540	-977	-1,021	-886	-983	-998	-1,380
	그 중 결제성 거래차-(E)	13	-94	-428	-380	-191	-446	-458	-701
	비결제성 거래차-(F)	-374	-446	-549	-640	-695	-537	-539	-679
3. 북한 GDP	UN 추정치(G)	10,241	10,425	10,635	11,026	11,967	12,932	13,699	NA
4. GDP 대비 비중 (거래규모) (%)	(A)/(G)	16.25	17.39	22.52	24.25	24.25	24.09	25.94	NA
	(B)/(G)	12.59	13.11	17.32	18.39	18.42	19.94	22.01	NA
	(C)/(G)	3.66	4.28	5.20	5.86	5.83	4.16	3.94	NA
5. GDP 대비 비중 (무역수지) (%)	(D)/(G)	-3.52	-5.18	-9.19	-9.26	-7.41	-7.60	-7.28	NA
	(E)/(G)	0.13	-0.90	-4.02	-3.45	-1.60	-3.45	-3.35	NA
	(F)/(G)	-3.65	-4.27	-5.17	-5.81	-5.81	-4.15	-3.94	NA

출처: <표 II-5>와 동일

가.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 분석

<표 III-4>는 1995~2005년 사이 북한의 대외거래를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로 나누어 재정리하고 있다. 이 표의 기점을 1995년으로 설정한 것은 이 해를 출발점으로 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호소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1995년 이전에도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소위 사회주의 국가간의 우호적인 거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가격면에서의 혜택과 지불 형태 및 기간에서의 편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북한으로 하여금 지불부담 자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총거래 규모는 1990년대 중후반의 16~24억 달러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24~4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5년경에는 경제위기 이전인 1990년의 거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의

대부분은 결제성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 거래에서 비결제성 거래가 등장한 1995년의 경우 그 규모는 3,0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물론 이러한 규모는 1997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7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0여년 사이 비결제성 거래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물자의 규모가 2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비결제성 거래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의 전체 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경우 20%에 채 못 미치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북한의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를 이처럼 총량 수준이 아닌 대외거래 수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비결제성 거래의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물자 유입이라는 점에서 그 총량 규모 자체가 북한의 대외거래 수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총대외거래 수지적자에서 결제성 거래에 따른 수지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언제나 비결제성 거래에 따른 수지적자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97년의 경우 북한은 대외 거래에서 총 2억 9천만 달러의 수입초과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결제성 거래에 따른 수입초과액은 1,2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비결제성 거래에 따른 수입초과액이 2억 7,700만 달러에 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해 북한의 대외거래로 총 2억 9,000만 달러의 물자가 순수입 되었는데, 이 가운데 북한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불하고 순수입한 물자는 1,2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2억 7,700만 달러의 물자는 북한의 자금 결제부담 없이 원조나 지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지역으로 순수입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2005년의 경우 북한의 대외거래 수지 차 14억 달러 가운데 비결제성 순물자 유입이 거의 절반에 상당하는 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거래 수지에서 비결제성 물자유입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은 그 규모를 GDP 대비 비율로 표시하는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대외거래 수지적자 규모는 GDP의 7~9%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이 비결제성 거래를 통해 자금 부담 없이 해외로부터 순유입한 물자의 규모는 GDP 대비 3~6% 수준을 차지한다. 북한 GDP의 3~6%에 해당하는 대량의 물자가 해외로부터의 원조나 지원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순유입되었으며, 이러한 규모는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 수지적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상회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앞에서 1990년 이후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을 토론하면서 그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 북한의 GDP에서 차지하는 대외거래 수지적자의 규모를 들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대외수지 적자규모의 거의 절반 이상을 북한의 비결제성 물자유입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만일 앞에서 제시한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에 관한 논거가 타당하다면, 또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비결제성 물자유입이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광의의 원조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이란 사실 북한경제의 원조의존성이란 말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 또는 원조의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식량공급과 소비에 관한 추세이다.

FAO와 WFP의 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2000~2004년 사이 매년

400~42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해외로부터 2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순수입하여 연평균 600~620만 톤의 곡물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난다.¹³ 북한의 총곡물공급 또는 소비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근 1/3에 달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과거 북한은 식량자급을 최고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추구하여 왔으며,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70년대의 경우 북한의 곡물무역이 수지균형을 맞추거나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¹⁴ 따라서 2000년 이후 북한의 총곡물공급에서 해외의 순수입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3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북한의 식량자급 기반이 사실상 모두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1990년대 중후반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벗어나 어느 정도 식량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지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경제에는 식량공급과 관련된 대외의존적 성격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해외의 식량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2000~2004년간 북한은 연평균 곡물(순)수입량 200만 톤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톤 정도를 국제적 식량지원에 의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곡물수입량의 절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제해 수입하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세계 각국의 원조에 의존한 것이나 다름 아닌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식량공급과 관련된 대외의존적 성격이란 결국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적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¹³ <표 II-3>을 참고.

¹⁴ 이에 관해서는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 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2004). pp. 63~68 참고.

나. 비결제성 거래의 구성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 또는 국제사회의 광의의 원조는 주로 어떤 형태로 누가 제공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표 III-5>는 1995~2005년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 내역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표를 꼼꼼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의 구성 내역이 단계별로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선 1995~1999년까지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를 주도한 것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최고 2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북한의 전체 비결제성 거래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00~2002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약간 변화한다. 기존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2000년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북한 사이의 비결제성 거래 역시 급속히 늘어나고, KEDO가 중심이 되는 관련국들의 대북 중유지원과 경수로 건설 관련 물자지원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당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필두로 국제사회와의 접촉빈도를 늘려가면서,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호전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3중 지원'의 확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은 2002년 10월 불거진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크게 바뀌게 된다. 2003년부터 KEDO가 중심이 되는 경수로 및 대북중유 관련 지원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역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북한당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긴급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2005년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KEDO 지원의 수준이 극히 미미할 정도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그간의 남북관계 발전을 토대로 한국과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이 시기 북한 전체의 비결제성 거래를 주도하게 된다. 요컨대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는 1995~1999년과 2000~2002년 그리고 2002년 이후라는 각 시기 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표 III-5>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현황, 1995~2005

(단위: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한국의 비상업적 거래	11	14	58	78	144	185	167	299	316	350	636
(북한으로부터 반입)	0	0	3	0	0	2	3	1	0	0	20
(북한으로 반출)	11	14	55	78	144	184	164	297	315	350	616
2. 중국의 무상원조	0	0	34	32	48	28	69	16	11	15	38
3.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4	27	168	216	190	153	248	220	133	152	45
4. KEDO 경수로 및 증류	15	25	23	48	63	187	162	163	78	24	0

주: 1.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의 경우 한국의 직접적인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불포함(이는 한국의 비상업적 거래에 포함. 단, 국제기구 등을 통한 한국의 간접적인 인도적 대북지원은 포함. 이는 한국의 비상업적 거래에는 불포함).

2. KEDO 지원의 경우 한국의 경수로 지원은 불포함(이는 한국의 비상업적 거래에 포함).

출처: <표 II-5>와 동일

한편, 거래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95년 이후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를 주도한 나라는 바로 한국으로 나타난다. 우선 북한의 최대 거래 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는 연간 7,000만 달러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우호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외거래에서의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표 III-5>에 나타난 중국의 무상원조 액수가 과연 중국과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를 모두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가 연간 최고 7,0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과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규모가 2002년 이후 연간 2~6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사적이다. 물론 이미 언급했듯이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1995년 이후 최고 2억 5,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2003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5년에는 5,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중 성장세를 지속해 2005년의 경우 6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국과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 규모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뜻이다.

다. 북한경제의 원조의존성

이상에서처럼 북한의 대외거래를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GDP의 최대 7%에 달하는 대외거래 수지적자 내역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 스스로가 적자를 결제·청산할 부담을 지고 있는 결제성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지적자로, 그 규모는 2000년 이후 대략 GDP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결제·청산 부담을 지지 않는 비결제성 거래로부터 유입되는 물자의 규모

를 나타내는 수지적자로, 그 규모는 2000년 이후 대략 GDP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북한이 비결제성 거래로부터 유입하는 물자의 규모가 GDP의 4~6%에 달한다는 사실은 현재의 북한경제가 해외로부터의 광의의 지원 또는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비결제성 거래를 주도해온 나라는 북한의 최대 거래 상대국인 중국이나 국제기구 등이 아니라 한국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경제가 이러한 비결제성 물자의 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곧 북한경제의 대(對)한국의존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 북한의 대외거래 패턴과 의미: 한국 對 중국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대외거래를 분석하면서, 현재 북한의 최대 거래상대국은 중국이지만, 북한에 가장 많은 비결제성 물자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가운데 과연 누가 더 북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표 III-6>은 매우 흥미롭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90년 이후 북한과의 총거래 규모면에서 중국은 언제나 한국을 앞서왔다. 그런데 양자의 대북거래 패턴은 완전히 달랐다. 우선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북 거래가 상업적 목적의 결제성 거래였으며, 중국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대북거래는 비결제성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결제성 거래와 비결제성 거래

를 합친 총거래에서는 한국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결제부담을 가지는 결제성 거래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은 언제나 큰 폭의 적자를 보여 왔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국과의 결제성 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다량의 경화를 획득하는 동시에 지불부담을 지지 않는 비결제성 거래를 통해 다량의 물자유입 또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북한은 한국과의 결제성 거래를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중국과의 동일한 거래에서 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기타 다른 나라와의 동일한 거래에서 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더욱이 이 해 북한은 한국과 6억 달러의 비결제성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그만큼의 물자를 지불부담 없이 북한으로 유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표 III-6> 북한의 결제성 거래 수지 현황, 1995~2005

(단위: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對한국	169	127	130	41	54	61	111	197	169	168	221
2. 對중국	-423	-428	-379	-266	-239	-386	-337	-180	-222	-199	-544
3. 對기타 국가	-138	-42	236	239	90	-103	-154	-208	-394	-428	-378
계	-392	-344	-12	13	-94	-428	-380	-191	-446	-458	-701

출처: <표 II-5>와 동일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경제의 입장으로서, 한국과의 거래가 중국과의 거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북한이 정상적인 대외거래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북한이 다른 모든 나라와의 결제성 거래

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한국과의 이러한 거래는 다른 나라와 북한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물적인 기반이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05년 북한은 한국과의 결제성 거래를 통해 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및 여타 국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지적자를 보전함으로써 그만큼의 무역규모 확대효과를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한국과의 거래는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지탱해주는 물질적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결제성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로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과의 거래에서 상업적인 형태로 기계류를 수입할 때 그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어떤 제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 북한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그 수입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차관의 형식으로 쌀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 어떤 요인으로 한국의 쌀 지원이 중단된다면,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동일한 형식의 쌀 차관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중국과의 거래는 이러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양국의 결제성 거래에서는 북한이 언제나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상지원과 같은 중국의 비결제성 거래규모 역시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대(對)한국 거래가 동일한 규모의 대(對)중국 거래보다도 북한경제에게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데이터만을 해석할 경우에는, 비록 중국이 북한의 최대 거래국이기도 하지만,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

어서는 한국과의 거래가 중국을 포함한 북한의 그 어떤 거래상대국 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7>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단위: 천 톤)

구분	중국	태국	리비아	예멘	이란	러시아	시리아	합계
1991	110	-	-	-	75	4	-	189
1992	110	-	20	-	22	-	-	152
1993	105	-	10	-	21	-	-	136
1994	83	-	8	-	-	-	-	91
1995	102	-	8	-	-	-	-	110
1996	93.6	-	-	-	-	-	-	93.6
1997	50.6	-	-	60	-	-	-	110.6
1998	50.3	-	5.3	-	-	-	5.3	60.9
1999	31.7	-	-	-	-	-	-	31.7
2000	38.9	-	-	-	-	-	-	38.9
2001	57.9	-	-	-	-	-	-	57.9
2002	47.2	-	-	-	-	12.5	-	59.7
2003	57.4	-	-	-	-	-	-	57.4
2004	53.2	8.1	-	-	-	-	-	61.3
2005	52.3	-	-	-	-	-	-	52.3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흥미롭게도 이 경우에는 쉽게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우선 <표 III-7>은 북한의 원유수입 실적을 수출국가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놀랍게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이 도입한 원유의 거의 전량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유는 현대경제를 구동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인 동시에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전략물자의 하나이기도 하다. 북한과 같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나라의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는 일이 언제나 그렇게 손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의 원유도입 전량을 중국이 공급한다는 것은, 그것이 유상으로 판매되었는가, 무상으로 지원되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경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 제공하는 중국의 무상지원의 규모 역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 이후 중국의 공식통계는 이러한 무상지원 규모가 최고 연 7,0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통계의 신뢰성은 차치하고, 여기에는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무역에서는 이른바 ‘우호가격’이라 불리는 가격적 혜택이 주어진 것은 물론 지불기한의 연장이나 탕감, 여타 물자로의 대체결제 등 각종 비가격적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중국의 대북 무역이 여전히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여전히 중요한 의문으로 남는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북한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공식통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북한 주민들에 의한 보따리 무역이다. 현재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물품이 이러한 보따리 무역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한 중국의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일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요컨대, 이 글에서 우리가 이용한 여러 공식적인 데이터를 분석

하는 경우, 현재의 북한경제에 가장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는 대외거래는 곧 한국과의 거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한국과의 거래보다는 중국과의 거래가 북한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소 모호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의 북한경제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및 중국과의 거래 그 어느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기본 축이라는 사실이다.

IV

남북교역과 북한경제에 대한 쟁점과 가설

앞의 제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북한의 대외거래에 있어 총량 규모면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이며, 무역수지 기여도나 비상업적 물자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전체 거래 상대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대북거래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양국의 거래가 늘어나는 속도가 북한의 다른 어떤 교역상대국 보다도 더욱 빨랐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처럼 빠른 속도의 교역증가를 주도한 것이 결제성 거래가 아니라 비결제성 거래였다는 사실이다. 1995년 이후 북한의 연평균 교역량은 2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국과 북한의 거래는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과 이 가운데 비결제성 거래의 비중이 절반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특징을 서로 결합해 보면, 그것은 그간 남북한의 교역이 비상업적 또는 비경제적 동기에 의해 의식적으로 확대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그간의 남북교역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 온 한국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은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만일 남북교역의 확대가 순수한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주도되었다면, 이에 대한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의 추구야말로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하고도 자연스런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의 교역이 특정한 경제외적 효과를 배경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에 의해 힘입은 것이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경제외적 효과가 적절한 것인가, 남북교역은 과연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인가, 그에 따

른 부작용은 없는가와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간 남북교역 및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제반 쟁점들과 그 쟁점들에 개입하였던 다양한 가설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세 가지 쟁점과 여섯 가지 가설들

남북교역 및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무수히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남북교역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의 시장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남북교역이 과연 북한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여기에 개입한 각각의 긍정적·부정적 가설들 여섯 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해 보도록 하자.¹⁵

¹⁵ 흥미롭게도 남북교역을 둘러싼 제반 논쟁과 가설들은 이제까지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거의 없다. 이들은 주로 공개적인 언론매체를 통한 칼럼을박이나 정책적 토론장에서의 입장 차이 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논쟁에 익숙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학술적인 논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처럼 다소는 비학술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이러한 논쟁과 가설들을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조금은 무모한 방법을 사용한다. 즉 이제까지 언론이나 연구자들의 개인적 토론에 머물던 논의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① 이들을 어떤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들로써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② 우선 각각의 논의와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③ 이러한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 논의와 입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여, ④ 이 글의 필자가 그 논의와 입장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구체적인 논

가.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

실제로 남북교역이 오늘날과 같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그와 관련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퍼주기’ 논쟁일 것이다. 남북교역이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국의 대북지원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개념적으로 보면 퍼주기 논쟁은 남북교역과 관련된 두 가지의 대립적 가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이들 가설이란 이른바 ‘경제평화론’ 또는 ‘경제를 통한 평화의 가설’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써 제기된 ‘경제(경협)무용론 또는 위해론’을 말한다. 퍼주기 논쟁은 남북교역 규모가 연 10억 달러를 돌파한 오늘날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이 논쟁을 촉발시킨 두 가지의 대립적 가설 역시 여전히 남북교역에 대한 외부세계의 중심적 시각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고 있다.

우선 ‘경제평화론’이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남북교역이 발전하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증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¹⁶ 물론 이러한 가설이 남북교역의

쟁의 사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시사점들을 임의적으로 재단하는 위험이 있지만, 이들 논쟁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널리시틱하고 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학술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글이 남북교역을 둘러싼 여러 논쟁을 다루면서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논쟁에 대한 명확한 출처의 제공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러한 한계와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 글의 논의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¹⁶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제평화론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최근 우리 학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평화경제론’에 대한 논의와는 다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햇볕정책과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들 세 가지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평화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교역이 증대되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는 부침을 거듭할 수 있고, 이러한 정치군사적 관계가 역으로 남북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처럼 단기적이고도 돌발적인 정치군사적 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이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결국 양국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양국 국민의 신뢰 회복 및 동질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양국이 정치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그간의 남북교역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가설로 인해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남북교역을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하는 경향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남북교역은 비단 거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에게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경제주체들에게도 한반도 평화라는 간접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한국경제 전반의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

있다. 우선 평화경제론이란, 아직은 하나의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의 증진이 경제협력을 촉진하며 다시 경제협력의 증진이 평화의 정착을 돕는다’는 일종의 이중적 인과성을 강조하는 개념화하려는 논의이다. (조민, “평화경제론”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2006); 김영운 외,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서울: 통일연구원, 2006)) 이 글에서 말하는 경제평화론이 남북경제협력의 평화증진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평화경제론은 이를 포괄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차원의 여타 변수들까지도 고려하는 개념체계라는 뜻이다. 또한 햇볕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체계이며, 비단 남북경협에만 국한된 논리체계가 아니다. 따라서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언급하는 경제평화론이 햇볕정책이라는 거대 담론의 한 가지 구성부분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곧 햇볕정책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안보비용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남북교역의 간접적 효과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이라는 공공재의 공급을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수익성이라는 잣대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 경우 그 공급량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언제나 한국경제 전반에 비추어 본 적정(optimal) 공급량에 미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배경으로 그간 한국정부는 남북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대북교역은 비상업적 거래 또는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그 어떤 다른 나라와의 거래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평화론에 대해 일찍부터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비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남북교역의 평화적 효과는 가시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역진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처럼 불확실한 평화적 효과를 전제로 막대한 대북지원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북한이나 북한당국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 아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비판은,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교역의 수익성이 극히 열악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대북투자에 나선 한국기업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다수 기업은 손실을 기록하고 대북사업에서 멀어지거나 여전히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교역의 의

¹⁷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김영윤,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서울:

미란 그것의 경제적 효과(수익성)가 아니라 그것의 비경제적 효과(평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간 남북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는 별로 호전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남북교역이 점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도 남북간에 서해교전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것 등이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교역이 가지는 평화적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더욱이 여기에 일종의 개연성을 삽입하면, 1990년대 중반 경제가 몰락하면서 위기에 빠진 북한정권이 이후의 남북교역에 힘입어 체력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비경제적 효과를 겨냥해 실시된 남북교역의 확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본래의 목표에 역행해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켰다는 말이 된다. 전자의 주장을 소위 ‘경제(경협)무용론’이라고 정의한다면, 후자의 입장 역시 이와 유사하게 ‘경제(경협)위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법적 통일’에 앞서 우선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정경분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남북간에 정치군사대결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협력할 분야는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중략)… 바다와 하늘 길이 열렸으며 끊어진

통일연구원, 2004)의 서베이를 참고.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개성에 남북의 자본·기술과 노동력이 결합될 산업공단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근 1만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고,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을 왕래하는 인원이 6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역량도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실천이 진척됨에 따라 남북간에는 신뢰가 쌓이고 이제 화해협력관계는 역전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남북대화가 정례화되고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협합의서들이 체결 되는 등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사부문에서도 비무장지대에서의 철도·도로연결공사와 인적·물적 왕래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동원,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과제,” 『6·15남북공동선언 4년 회고와 전망』(서울: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연세대 통일연구원, 2005), pp. 38~42.)

…햇볕정책은 남북간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햇볕정책은 대북송금 사건과 고폭실험 비공개에서 보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칙도 전략도 없이, 그리고 비밀스럽고 부도덕하게 추진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햇볕정책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무력에 의한 체제보존,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대남 접근방식을 포기하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상은 핵에 의한 무력강화만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통받는 북한 인민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교류협력정책이 민족공조란 이름하에 북한 엘리트들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념만을 높여주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남남갈등과 반미정서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유호열, “[시론] 햇볕정책의 그늘진 뒷거래,” 『조선일보』, 2003년 7월 10일.)

남북교역을 둘러싼 퍼주기 논쟁은 위와 같은 경제평화론의 가설에 대해 경제무용론이나 위해론이 역공을 취하면서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양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나 벌어져 있는가

는 위에 언급한 서로 대립적인 두 가지 인용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남북교역과 북한경제 시장화: 트로이 목마론과 앙상레짐 구원론

남북교역의 평화적 효과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은 이후 양국의 교역규모가 증대하고, 그것이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과연 남북교역은 북한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란으로 확산되게 된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아마도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의 변화 또는 시장화를 촉진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된 주제일 것이다.¹⁸ 물론 앞서와 유사하게 이러한 쟁점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 또는 가설은 남북교역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다. 남북교역이 확대될수록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거나 적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또는 대립적 가설 역시 만만치 않아서, 남북교역은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화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편의상, 그 이유는 뒤의 설명에서 자명해지겠지만, 전자의 가설을 남북교역의 ‘트로이 목마론’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이미 몰락해 버린 북한의 구체제 ‘앙상레짐에 대한 구원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트로이 목마론’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의 북한은 대외거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경제이며,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대외

¹⁸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관련된 논쟁은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서울: 통일연구원, 2005)의 제Ⅲ장이 자세하다.

거래 파트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시장경제 체제이다. 물론 중국의 거래 규모가 한국보다는 크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에서 완전한 시장경제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한국과 북한의 교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곧 북한경제에서 시장경제와 맞닿는 부분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또한 이를 위한 내부 경제시스템의 재정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장에 대한 관념 및 관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위해 북한이 시장경제적 관행을 인정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나, 이에 고용된 북한의 노동력이 한국기업의 통제와 관리에 적응해 나가는 것 등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은 이러한 시장경제적 요소를 정치적인 이유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경제적 영향을 전면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달리 그 속성 자체가 ‘확장형’이라는 점에서 이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일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북한의 전 지역에 10개 또는 20개 이상 건설된다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로만 보기는 힘들 것이다. 남북교역이 확대될수록, 북한당국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진전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언뜻 보면, 이러한 트로이 목마론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게도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동일하게 당연해 보인

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북한이 대외거래, 특히 한국과의 교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침체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이며, 이에 실패할 경우 북한의 체제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현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대외거래는 시장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외거래가 확대될수록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가 위축되거나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위축 또는 변질이 진행될 경우 이는 결국 북한의 현사회주의 정권의 유지에도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북한 내부의 사회주의 경제부문과 새로이 시장경제와 맞는 대외거래 부문을 철저히 분리한 후, 대외거래 부문에서 얻어진 경제적 과실을 북한당국 또는 사회주의 중앙계획자가 철저히 독점하여, 이를 다시 내부 사회주의 부문의 확대 또는 회생에 쏟아 붓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주위를 경제적·지리적·물리적인 철조망으로 여타 부문과 차단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경화(hard currency)를 중앙당국자가 일괄적으로 집중시켜 다시 이를 여타의 사회주의 경제부문에 투입해 이의 회생을 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외거래의 확대는 특정의 경제적·지리적·물리적 공간에 한정되고, 이의 확대에 비례해 사회주의 경제가 강화되는 반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과거 중국이 개방을 통해 획득한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금을 대내의 사회주의 부문의 개혁에 원용하는 이른바 ‘개방과 개혁의 정책조합’으로 점진적 시장화의 길로 나아갔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개방을 통해 들어오

는 시장경제의 영향력은 차단한 채 이로부터 얻어지는 자금만을 대내의 사회주의 부문의 강화에 투입하는 이른바 ‘개방과 역(逆) 개혁의 정책조합’으로 시장화의 길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중후반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부문이 형해화 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일 한국과의 교역으로 북한이 일정한 경화를 획득하고 이를 다시 사회주의 부문의 강화에 사용한다면, 이는 곧 기존의 몰락한 북한의 구(舊)경제체제를 되살려내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쟁은 남북교역의 평화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만큼 명시적이고 치열하게 전개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외부 관찰자들의 시각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토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북한경제가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경제의 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다. 남북교역과 북한개발: 개발지원론과 개발무의론

북한경제에 대한 남북교역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앞서와 같이 경제체제론 또는 이행론의 시각에서만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론 또는 개발론의 시각에서도 논란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북교역 또는 지원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과거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사

회의 지원경험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이는 속칭 원조의 역설(paradox of aid)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고, 이에 따라 앞서의 지원 자체가 다시 외채 등의 형태로 경제에 부담을 줌으로써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결여한 저개발국의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그것이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쓰여지지 않은 채 낭비되거나 심지어는 내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성장 모티브를 저해할 위험마저 있다는 경고이다.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조의 역설이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남북교역 또는 한국이 제공하는 대북 지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매우 거시적이라는 점에서, 질문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데이터나 경험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미시적 채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및 북한의 상업적 식량 수입 추세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북한 농가의 생산동기 등을 하나로 묶어 교역의 구축효과(crowding effect)를 개념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증가할 경우, 이는 한편으로 북한의 쌀 시장가격을 떨어뜨려 ‘북한 농가의 생산 의욕 저하 → 국내의 쌀 생산(공급) 저하’를 불러 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상업적 식량수입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북한 전체의 자체적 식량조달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경우 상업적 식량수입의 감소나 시장가격의 하락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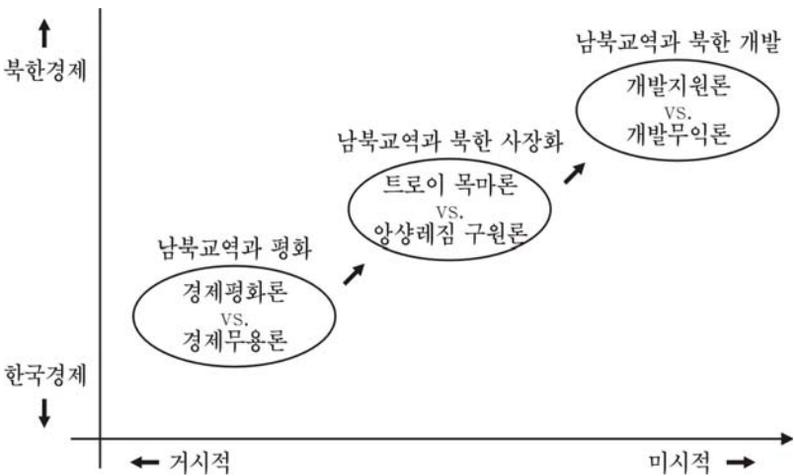
발생한 경제적 여유자원이 여타 부문의 경제성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된다면, 그에 따른 성장의 정(+)의 효과가 자체적 식량조달 능력 하락이라는 부(-)의 효과를 얼마든 상쇄하고 또 능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북한당국이 이러한 경제적 여유자원을 비생산적 부문에 낭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제적 식량지원은 성장에 대한 정(+)의 효과 없이, 극단적인 경우, 그만큼의 북한 자체적 식량조달만을 줄어든게 하는 구축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구축효과가 쌀 이외의 여타 지원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면, 한국의 대북지원을 비롯한 남북교역이 반드시 북한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앞서 언급한 원조의 역설을 북한에서도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¹⁹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구축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논의가 현재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경제적 자원의 고갈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대북지원 등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에 추가적인 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곧 북한의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교역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응원군의 역할을

¹⁹ 물론 이것과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북한의 이에 대한 거부 그리고 한국의 대북 쌀 지원 등을 바라보는 미국측 연구자들과 한국측 연구자들 사이의 견해에 있어서의 뉘앙스 차이를 음미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S. Haggard and M. Norland, *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for North Korea, 2005)와 이를 둘러싸고 전개된 한국 및 미국 당사자들의 편지를 통한 공방 <<http://www.hnkc.org/document/mou09025b-eng.pdf>>; <<http://www.hnkc.org/documents/hnMOU090705.pdf>> 이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한다는 견해가 보다 지배적인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경험 자료들이 축적될 경우 그 논의의 축이 어디로 흐를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IV-1> 남북교역 및 북한경제에 대한 쟁점과 가설



라. 세 가지 쟁점과 여섯 가지 가설들의 연관 구조

<그림 IV-1>은 이상에서 논의한 남북교역의 효과에 대한 세 가지 쟁점과 여섯 가지 가설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남북교역과 관련된 쟁점의 형태가 처음의 한반도 평화와 같은 경제외적·추상적 주제로부터 최근

남북교역의 구축효과와 같은 경제적·구체적 주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교역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경험적 지식과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일어나는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데, 각각의 쟁점에 따른 가설들을 그 논리적 친화력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그룹은 남북교역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설들의 그룹이며, 또 한 그룹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룹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일 어떤 연구자가 남북교역의 평화적 효과를 인정한다면, 그는 동시에 남북교역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키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도와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처럼 생각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남북교역을 통해 한편으로는 북한의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남북경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이제까지 우리가 남북교역과 관련된 세 가지의 쟁점과 여섯 가지의 가설들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결국 남북교역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자들이 매번 쟁점을 옮겨가면서 자신들의 논리적 외연을 계속 확장시켜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 전체의 쟁점과 가설을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쟁점 하나와 그에 관련된 각각의 가설들을 파악해 그 구조를 보다 엄밀히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가설들일까? 여기에서는 일단 그것을 남북교역의 평화효과 및 그것을 둘러싼 두 가지 대립적 가설, 즉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또는 위협론)이라고 파악한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가설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이들 가설의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그 이유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토론 방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단 이들 쟁점과 가설을 남북교역과 관련된 중심 쟁점과 가설로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왜 이들이 중심가설과 쟁점이 되는가를 논의하도록 한다.

2. 중심가설 1: 경제평화론의 논리와 구성

우리는 앞에서 경제평화론을 남북교역의 효과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가설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매우 의외이겠지만, 이제까지 이 가설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를 굳이 짐작하자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우선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로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이 가설 자체의 직관적 호소력이다. 누구나 이 가설을 들으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여 그것의 논리적 구조를 체계화 시킬 필요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이 가설은 당위론적 호소력 역시 갖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다수 우리국민의 입장으로서 이 가설이 맞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타의 정책적 대안이 사실상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설은 당위론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가설

은 이미 남북교역의 확대를 추구하는 우리정부의 정책적 비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굳이 스스로의 내용을 정련하고 세련화 시킴으로써 그 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경제평화론은 그간 우리사회의 대북인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가설의 지위를 누렸으면서도,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거나 심지어는 공개적인 학술토론의 대상이 된 적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가설의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가설의 논리적 구조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변 논의들을 토대로 역추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대상 가설의 논리적 구조를 함부로 재단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경제평화론의 논리적 구조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그에 대한 대립 가설들과 서로 비교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가설의 논리적 외연을 확장시켜 그 함의를 찾아내는 일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글에서 전개될 논의는 이러한 위험성과 실용성을 모두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 경제평화론의 논리

만일 어떤 연구자가 ‘남북교역이 증대하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려 한다면, 그는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서로 연결된 일련의 세부적인 부분 명제 또는 주장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A-1] 현재 북한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경제적 피폐상황에 놓여 있다. 그 근본원인은 북한 내부의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갈되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경제가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북한당국 역시 이를 위한 대외거래 확대와 국제적 원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적 피폐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체제의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북한경제는 대외의존적, 아니 보다 정확히 표현해서, 원조의존적 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북한당국이 좋건 싫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A-2]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적·원조의존적 성격은 앞으로 약화되기 보다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경제가 현재의 피폐상황으로부터 점차 호전되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이의 유지·발전을 위한 경제적 자원 소요량 역시 증대할 수밖에 없는데, 현 북한경제의 상태로는 이러한 소요량 또한 외부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재화의 양과 질이 극히 열악한 만성적 무역적자국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적 외부자원 유입을 위해서는, ① 기존의 경제체제를 보다 외부 지향적으로 개조함으로써 더 많은 대외거래를 수행하거나, ② 그도 아니면 더 많은 추가적 원조 유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모두는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적·원조의존적 성격이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B-1] 이러한 북한경제와 한국의 교역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달리 말하면 그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성이 그만큼 증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교역은 양국 모두의 상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인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적 규모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와 북한경제의 상대적 의존성의 차이는 서로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곧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경제적 레버리지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B-2]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교역의 증대란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과실이 들어오고 그 규모 또한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과실은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남북교역이 축소될 경우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북한경제의 유지·발전에 문제를 일으켜 북한의 체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다. 이는 남북교역이 증대할수록 북한 스스로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유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단순히 남북교역을 증대하는 것만으로

도 북한의 정치군사적 일탈 가능성을 억제하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B-3] 남북교역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한국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레버리지의 효과 또한 보유하고 있다. 남북교역의 경제적 과실은 상대적으로 북한경제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이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쳐 북한이 얻는 경제적 과실의 규모를 통제하려 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정책적 양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이다.²⁰

[B-4] 다만, 이러한 레버리지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한국이 남북교역이라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이용해 북한의 체제와 관련된 중요 변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는 북한의 특성상 극심한 정치군사적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고 남북교역 자체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경제적 레버리지가 사라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1] 경제적 교역과 정치적 평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미 수많은

²⁰ 실제로 그간 한국이 거의 모든 남북교역을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해왔다는 주장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일례로 이에 대한 한국의 북한경제 연구자들의 상호 토론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KDI 북한경제팀, “북한경제제제가 북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효과와 한계,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2006년 11월호.

은 경험적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이론적 뒷받침 역시 매우 튼튼한 사실 명제의 하나이다. 과거 전쟁을 벌였던 유럽의 제국들이 전후 경제적 교류의 확대와 통합에 주력하면서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중국에는 유럽통합이라는 정치안보적 동맹체의 형성으로 나아간 것이나, 이를 토대로 제기된 이른바 ‘자본주의 평화론(capitalist peace)’이 그 좋은 예이다.²¹

[C-2]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상관관계 역시 그간의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급속한 남북교역 증대를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을 포함한 양국간의 교류와 회담이 정례화·제도화 되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제적 진출에 상응한 북한의 정치군사적 양보가 가시화 되었으며,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진행됨으로써 그 어떤 돌발적인 정치군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위의 각각의 주장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은데다,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이라면 이들 주장 모두에 매우 익숙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주장 각각에 대

²¹ 이에 대한 이론적 시각으로서 예를 들어 조민, “평화경제론,”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2006)를 참고.

해 부연 설명을 하기 보다는, 이들을 몇 가지의 그룹으로 묶어 그것이 어떻게 경제평화론의 가설로 연결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나. 경제평화론의 구성

먼저 [A-1]과 [A-2]를 묶어 보면, 이는 현재의 북한경제를 대외의존형 원조경제로 본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대외거래를 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북한경제는 대외거래 특히 외부로부터의 무상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만일 이러한 결론이 맞다면, 북한경제를 원조경제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현대 경제의 가장 기초적 투입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식량과 석유의 절대량을 외부세계의 무상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를 원조경제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조경제론적 시각은 우리의 관심인 경제평화론과는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우선 이러한 시각에 서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교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과의 무역규모 축소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북교역이야말로 경제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외부 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남북교역의 확대가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또 실현할 수도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말이 된다. 평화경제론에 주장하는 ‘남북교역 확대 → 한반도 평화의 증진’이라는 채널의 전반부가 한국경제의 선택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 현실

화 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시각에 서게 되면, 북한의 입
 장으로서는, 남북교역의 확대가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된다. 북한
 이 나름의 이유로 남북교역의 확대를 저지하거나 심지어는 중단
 시킬 위험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선택여하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한반도의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남북교역을 확대하는 일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평화경제
 론에서 말하는 남북교역의 ‘장기적 또는 궁극적 평화효과’가 실현
 될 수 있는 물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만일 현재의 북한경제가 원조경제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만일
 북한이 과거처럼 남북교역 없이도 스스로의 경제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면, 평화경제론의 기반은 매우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그것
 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조차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나름
 의 이유로 남북교역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역
 을 수시로 중단·축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한국경제가 장
 기적으로 남북교역의 확대를 추구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조경제의
 입장에 서면, 남북교역을 둘러싼 한국과 북한의 힘의 관계가 매
 우 분명해진다. 한국은 거의 일방적으로 경제적 과실을 제공하는
 측이며, 북한은 이를 제공받는 측이다. 더욱이 북한으로서는 이러
 한 과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교역
 이라는 경제적 과실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과 접촉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불편함 또는 불이익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국
 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북한당국이 이 식
 량지원과 관련된 여러 부대조건에 매우 완강히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북한경제의 유지에 결정적 중요성을 미치면서 북한당국으로서도 1990년대 후반을 전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개방, 국제사회의 식량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태도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² 물론 남북관계는 이와는 다른 여러 특수한 측면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남북교역과 관련해 이처럼 단시일 내에 일방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원조의존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성 만큼은 동일하게 관철될 것이라는 뜻이다.

원조경제론적 시각에서 살펴본 힘의 관계는 곧 남북교역이 남북관계 전반에 갖는 의미로 연결된다. 이러한 주장은 [B-1]에서 [B-4]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이들 주장을 하나로 집약하면, 그것은 ‘레버리지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교역은 남북한 관계 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레버리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레버리지론의 핵심은 [B-3]과 같이 ‘한국경제가 한반도 평화증진과 같은 남북관계 전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교역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실제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B-2]와 같이 ‘남북교역의 확대 그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전반을 악화시키지 않게 스스로를 제어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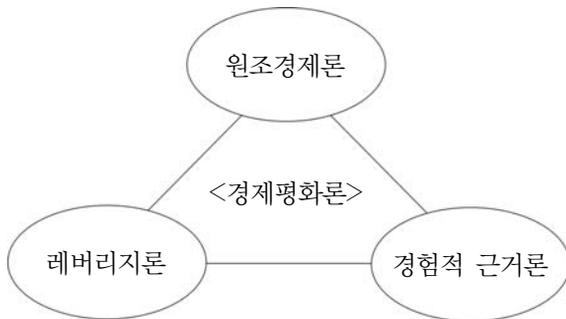
²² 이에 대해서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 D. Thesis. University of Warwick, 2003. pp. 266~268 참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어떤 돌발적 상황을 맞아 남북교역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구체적인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역규모 자체를 확대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곧 남북교역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방기하는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교역이라는 레버리지를 가장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돌발적 상황을 맞아 남북교역이라는 레버리지를 실제로 사용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남북경협이라는 한국의 레버리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B-4]와 같이 남북경협이라는 레버리지를 구체화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레버리지론은 경제평화론에서 주장하는 ‘남북교역 확대 → 한반도 평화의 증진’이라는 채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평화론은 한국이 남북교역을 레버리지로 북한에 그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남북교역 확대 자체가 북한 스스로의 판단 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향적으로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간 우리사회에서 남북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평화론과 함께 남북관계 전반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일어난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평화론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이 글의 견해와 반대되는 경

제평화론의 해석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평화론의 일면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논리적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남북교역 확대 →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경제외적 양보 획득 → 한반도 평화의 증진’이라는 해석에는 쉽게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림 IV-2> 경제평화론의 구조



그런데 위와 같이 경제평화론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B-3]과 같이 ‘남북교역 확대 →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경제외적 양보 획득’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가시적이고 이에 따라 설득력이 높는데 반해, [B-2]와 같이 남북교역의 확대 자체가 경향적으로 평화를 증진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시적이지 않아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제평화론에 대한 학술토론에서 보다는 이의 정책적 원용에서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경제평화론이 순수한 학술적 가설이 아니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여기에 추가되어야 한다. 당연

한 말이지만, 이 ‘또 다른 무엇’은 [C-1]과 [C-2]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경험적 근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앞서의 [B-2]의 주장은 이미 세계의 여러 다른 사례에서 그 경험적 타당성이 확인된 것이며, 그간의 남북한의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적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림 IV-2>는 경제평화론의 논리적 구조를 원조경제론과 레버리지론 그리고 경험적 근거론의 세 가지 부분 주장 또는 가설의 복합 구성물로 그리고 있다. 물론 경제평화론에 있어 이러한 경험적 근거론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경험적 근거란 언제나 그에 대한 반증의 사례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경제평화론의 경험적 근거들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 이것이 오히려 경제평화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역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경험적 근거론을 포함시킨 이유는, 경제평화론이 지향하는 정책적 가설로서의 위치를 감안할 때, 그 논리적 구조상 경험적 사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중심가설 2: 경제무용론의 논리와 구성

앞에서 우리는 경제평화론을 원조경제론과 레버리지론 그리고 경험적 근거론이라는 세 가지 부분 가설의 복합적 구조물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 가설인 경제(경험)무용론 또는 위협론 역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물

론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손쉬운 일도 아니다. 경제평화론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이제까지 거의 체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평화론에 대한 반론은 주로 개별 연구자들의 사적인 또는 비공개적인 토론에 의해서 제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욱 많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러한 경제평화론에 대한 반론의 각 구성 내용을 약간은 임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재구성하는 위험을 무릅쓰고자 한다.

가. 경제무용론의 논리

만일 어떤 연구자가 ‘남북교역은 한반도 평화 증진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말하려 한다면, 그는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주장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D-1] 현재 북한경제는 극심한 피폐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유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가 대외거래의 확대 및 외부원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거래 및 외부원조의 확대는 현재의 북한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대외거래와 원조의 확대에 나설 경우, 이는 곧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 또는 중

속성의 심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북한의 전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외부세계가 북한에 대한 거래와 원조를 무기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현재의 북한경제가 처한 상황으로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 또는 전체 사회질서의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당국으로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당국으로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하나는 북한경제의 유지·발전을 위해 대외거래 및 원조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경제의 대외종속성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유의 정책적 수단 또는 카드를 확보하는 것이다.

[D-2]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과거 주변의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지정학적 능력과 같은 고유의 역량을 레버리지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거래 및 원조를 스스로 증가시키도록 유도 또는 강요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상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역시 이러한 의존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

을 확보한 셈이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내부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경제적으로 북한의 거래 상대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더라도, 양국의 경제교류를 둘러싼 힘의 관계에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 구(舊)소련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원조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지정학적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코메콘이라는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참여하라는 소련의 요구를 끝까지 방어한 경험이 있다.

[D-3] 현재 북한이 상대국으로부터의 거래와 원조를 끌어내는 데 사용하는 고유의 역량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과거와 같은 정치군사적·지정학적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 당국 스스로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무시(?)할 수도 있는 능력이다. 전자의 능력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거래와 원조를 강요하는 데 효과적이다.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와해될 경우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의 정치군사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자의 능력은 서구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래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곧바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란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은 스스로가 보유한 두 가지의 역량을 인질(人

質)로 하여 외부세계의 거래와 지원을 유도 또는 강요하는 수완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거래와 지원이 확대되고 북한의 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북한경제를 대외의존적 원조경제라고 파악할 수는 없다.

현재의 북한경제는 원조경제와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비록 북한경제가 외부의 거래 및 원조에 의존한다고 해도 이를 둘러싼 힘의 관계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대북원조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유예와 같은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점이나 1990년대 중후반의 극심한 식량위기 과정에서도 북한당국이 특정한 지원단체와 국가의 지원을 거부할 의사를 보이고 또 실제로 이를 거부한 점 등과 같이 그 사례는 매우 많다. 둘째, 북한에 대한 외부의 거래와 원조는 이를 제공하는 외부세계가 스스로의 선택 또는 선호에 의해 쉽게 단절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직면해도 중국이 쉽게 북한에 대한 거래와 지원을 축소할 수 없는 점이나, 2005년 이후 북한이 국제기구 등의 북한내 활동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유사한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WFP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식량원조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북한당국을 설득하는 점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외부세계의 거래와 원조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가 보유한 능력을 의식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1995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국

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식량지원에 관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다시금 이에 대해 북한 나름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이나, 중국을 상대로 때로는 정치군사적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때로는 경제적 개혁과 개방의 모습을, 또한 때로는 이 모든 면에서 보수적이고도 완강한 모습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경제를 원조경제라고 파악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역량을 담보 또는 인질로 하여 외부세계의 거래와 지원을 얻어내는 ‘특수한’ 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북한사회 자체의 고유한 특징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세계의 저개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잘 조직화되고 통제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은 경제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비대해져 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 역시 주변국에 부담을 줄 정도이며,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내부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제의 운명 또한 국민들의 후생수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들이 바로 그러한 북한의 고유한 특징들이다.

[D-4] 북한경제를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특수한’ 경제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것의 한국과의 관계 특히 남북교역을 염두에 두고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갖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은 스스로의 역량을 레버리지로 다른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거래와 지원을 ‘유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이를 ‘강요’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정치군사적·지정학적 능력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그 어떤 나라 보다도 한국에 대해 더 파괴적이다.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비롯해 양국간의 정치군사적·지정학적 대립이 그 어떤 나라와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북한에 대한 거래나 지원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그것을 되돌리거나 심지어는 탄력적으로 통제하기조차 극히 어렵다. 사정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오늘날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이를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 위기의 당사자가 바로 한국 국민들의 가족이고 친지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이 스스로의 능력을 레버리지로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거래와 지원을 확대한다는 말은 사실상 이를 한국경제에 강요한다는 말이 된다. 시중의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북한경제는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뽕 뜯기’에 나선다는 것이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경제는 한국경제에서 바라 볼 때 일종의 ‘갈취 경제’가 된다는 것이다.

[E-1] 위와 같은 북한경제의 특징을 감안할 때, 한국이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경제적 레버리지를 갖는다는 주장은 이론

적으로 허구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남북교역이란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레버리지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정반대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逆레버리지’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E-2] 일단 경제평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경제적 레버리지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 말을 북한의 입장에서 그대로 반복해 보면, 그것은 북한이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비경제적 레버리지, 다시 말해 정치군사적 또는 인도주의적 레버리지를 갖는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우선 한국이 특정한 북한의 정치군사적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특정의 남북교역을 레버리지로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정치군사적 정책 또는 입장이 특정의 남북교역에 대해 레버리지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한국에 경제적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말은 그와 관련하여 북한에 비경제적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말과 논리적으로 등가라는 뜻이다. 따라서 일단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한국만이 고유한 레버리지를 갖는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양국이 각각의 레버리지로 얻게 되는 손실과 이익의 크기가 어떤가 하는 점이다. 만일 이를 통해 발생하는 한국의 상대적 순이익(또는 순손실)이 북한 보다 크다면(또는 적다면) 한국이 보다 우월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비해 우월한 레버리지를 갖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쌀 지원을 레버리지로 북한에 장관급 회담 개최를 성사시키고 있다고 하자. 이는 북한의 입장으로서 장관급 회담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한국으로부터 쌀 지원을 얻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쪽의 레버리지는 정확히 다른 쪽의 레버리지와 맞물려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쌀 지원을 매개로 기존의 장관급 회담에 더해 군사회담을 요구할 경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받아들인다면, 이는 한국의 쌀 지원이라는 레버리지가 북한의 장관급 회담이라는 레버리지 보다는 더욱 강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며, 현재까지 그에 대한 경험적 사례 또한 축적된 것이 없다. 한국이 쌀 지원이라는 대북교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 보다 우월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뜻이다.

또 다른 상황은 한국이 ‘남북교역은 돌출적인 정치군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말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단기적으로 아무리 돌출적인 정치군사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남북교역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장기’란 여러 개의 ‘단기’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

로 어떻게 변화시키더라도 남북교역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남북교역의 장기적 레버리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

[E-3] 더욱이 문제는 남북교역이 증가할수록 북한이 기존의 비경제적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레버리지 역시 갖춘다는 사실이다. 남북교역이 증대한다는 것은 곧 한국의 경제주체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개발권과 같은 재산권은 물론 북한의 거래 파트너와의 경제적 관계 등 일체의 경제적 자산이 이러한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남북교역에서 발생하는 한국의 이러한 경제적 자산을 제한하거나 봉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며, 당국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한국의 대북 자산 규모가 미미한 남북교역 초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 사정은 매우 달라진다. 더욱이 한국은 이들 경제적 자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북한이 점점 증대하는 한국의 대북 자산을 레버리지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그 효과는 점점 더 증대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남북교역은 ① 한국에게만 배타적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②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더욱 큰 레버리지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③ 이를 근거로 한국이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비경제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F-1] 경제적 교역과 정치적 평화 사이의 일반적 인과관계는 남북한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경제적 교역이 오히려 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부추긴 특수한 사례는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국의 경우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양국간 교역이 시작되면서 특정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양국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비화된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²³

²³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교역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Solomon W. Polachek, "Dyadic Dispute: An Economic Perspective," *Peace Science Society (International) Paper 28(1)*, 1978; Solomon W. Polacek,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of Resolution 24(1)*, 1980; Solomon W. Polachek, "Conflict and Trade: An Economics Approach to Politic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In Walter Isard and Charles Anderton. eds. *Economics of Arms Reduction and the Peace Process* (Amsterdam: Elsevier Science, 1992); Mark J. Gasiorowski and Solomon W. Polachek, "Conflict and Interdependence: East West Trade and Linkages in the Era of Déten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6(4)*, 1982; Solomon W. Polachek and Judith A. McDonald, "Strategic Trade and the Incentive for Cooperation," In Manas Chatterji and Linda Rennie Forcey. eds. *Disarmament, Economic Conversion, and Management of Peace* (Westport, CT: Praeger, 1992); Ruth W. Arad, Seev Hirsch and Alfred Tovias. *The Economics of Peacemaking:*

[F-2]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관계 역시 이러한 부정적 사례는 무수히 많다. 2000년 이후 급속한 남북교역의 진전하는 과정에서도 서해교전이 발생했으며,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제2차 북핵문제가 돌출하였으며, 급기야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호전되거나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경험적 사례가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것이 과연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대표하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만일 북한경제의 진정한 모습이 앞서 언급한 갈취경제의 형태라면, 이들 사례 중 부정적 사례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간 남북교역의 확대를 불러 온 것이 스스로가 보유한 정치군사적 능력(?) 또는 위협이라고 본다면, 향

A Focus on the Egyptian-Israeli Situation (New York: St Martin's, 1983) 및 그와 관련된 계량적 논의와 반대로 교역이 갈등을 격화시킨다고 주장하는 Richard Ashley,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and Peace: The Sino-Soviet-American Triangle and the Modern Security Problematique* (London: Frances Pinter 1980); Nazli Choucri and Robert North, *Nations in Conflict: National Growth and International Violence* (San Francisco, CA: Freeman, 1975); Warner Feld, "Global Allies or Competitors: US Policy Toward an Ascendant European Community and Japan," In Charles E. Kegley Jr and Pat McGowan, eds. *Challenges to America: US Foreign Policy in the 1980s*. (Beverly Hill, CA: Sage, 1979) 등의 논의와 그와 관련된 계량적 증거들을 참고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한편, 교역과 평화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대극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K. Barbieri and G. Schneider "Globalization and peace: Assessing New Directions of the Study in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6, No. 4(1999) 역시 참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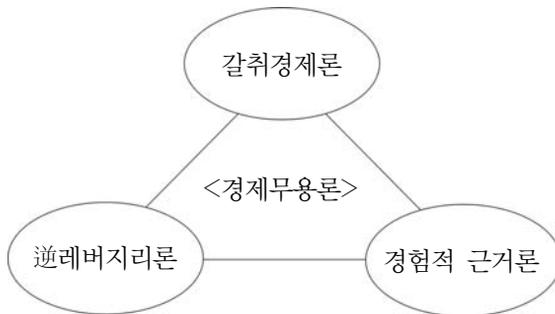
후의 교역 확대를 위해서도 결코 이의 약화 내지 양보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남북교역을 통한 경제적 과실을 향유함으로써 스스로의 체력을 회복하고, 이를 다시 종래의 정치군사적 능력(?) 또는 위협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여 남북교역의 확대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남북교역은 한반도 평화증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고(경제무용론), 만일 북한이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남북교역은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경제위협론).

나. 경제무용론의 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경제무용론의 각각의 주장들은, 앞서의 경제평화론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의 부분 가설 또는 시각으로 묶을 수 있다. 실제로 [D-1]에서 [D-4]는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한 시각으로서 편의상, 이를 북한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先軍경제론’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를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갈취경제론’으로 각각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E-1]에서 [E-3]는 남북관계 전반에 비추어 본 남북교역의 역할 또는 효과에 대한 시각으로서 ‘inverse leverage theory’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나머지 [F-1]과 [F-2]는 앞서의 부분 가설들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경험적 근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림 IV-3>은 경제무용론을 이들 세 가지 부분가설의 복합적 구조물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경제평화론과 그에

대한 반론인 경제무용론은 단순히 남북교역의 효과에 대한 입장 차이만을 반영하는 가설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북한경제에 대한 시각과 남북교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험적 사례들을 해석하는 기준 모두에서 철저히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요컨대 경제평화론은 ‘현재 북한경제가 원조경제의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의 정책적 노력으로 남북교역의 확대를 추구할 경우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한 스스로의 경제적 과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평화를 유지시키려 할 것이며, 이는 실제의 경험적 사례로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무용론은 ‘현재 북한경제는 일종의 갈취경제로서 스스로가 보유한 정치군사적 능력 등을 활용해 우리측에게 남북교역의 확대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남북교역이 확대되더라도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평화가 증진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당국의 체력을 회복시켜 평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의 핵실험 등 이에 대한 경험적 사례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림 IV-3> 경제무용론의 구조



물론 이러한 두 가지 가설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무용론의 각 주장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토론하였다. 이는 상당히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이라면 이제까지 경제평화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많지 않더라도, 이 가설 자체가 우리의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중심가설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생소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와 관련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차원의 대립은 언론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학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북한연구자들 특히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비공개적이며 사적인 토론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에게 그 내용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논리적 구조 역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한편으로 그 논리적 구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보다 쉽게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로 경제무용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욱 상세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평화론과는 달리 경제무용론의 각각의 주장에 대한 세부적인 부가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대신 마지막으로 왜 이러한 경제무용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언뜻 보면, 그 이유는 경제평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 반

대 경험들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남북교역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사례들은 경제평화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나 심지어는 그에 반대되는 사례라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것들이다. 우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평화론은 이러한 돌출적 정치군사적 상황의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가설 체계이다. 비록 이러한 부정적 상황 사례가 몇 번이나 더 돌출한다고 해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경제평화론의 가설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경제평화론은 한국과 북한이라는 양자적 관계를 대상으로 설정된 가설인 반면, 이제까지의 부정적 사례들은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이 한반도에 관련이 있는 세계 각국의 다자적 틀 안에서 제기되고 전개된 것들이다. 2002년 북한의 제2차 핵문제가 불거질 당시부터 그것은 한국과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진 정치군사적 충돌의 결과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따라서 적어도 학술적으로는 이들 부정적 사례들이 과연 경제평화론에 대한 반증의 사례로서 이용될 수 있는가 역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만일 이와 같은 종류의 부정적 사례들만이 나타났을 경우, 우리는 이 글에서 경제평화론에 대한 반론을 끄집어내어 이를 체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평화론 자체에 집중하여 이의 논리적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제시된 부정적 사례들을 그 가설 체계 안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글에서 경제평화론에 대한 반론을 명시적으

로 다른 것은 이 가설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외의 현실적 사례들 역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한국의 쌀 지원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측 대표는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한국 역시 이를 감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물론 그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가 한국의 대북 쌀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만큼, 이러한 발언은 결국 ‘한국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²⁴ 만일 이러한 해석이 맞다고 하면, 이는 현재 북한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한국과는 전혀 다른 입장과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경제평화론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전혀 다른 입장 또는 해석의 여지를 고려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 논리 구조상 북한은 한국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제공하는 경제적 과실을 인정하고, 이를 가정한 채 자신의 합리적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북한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평화론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다른 요소들을 토대로 남북교역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가설들을 찾아 그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우리가 이 글에서 경제평화론에 대한 반론을 명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²⁴ 이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권호웅 내각참사가 한 발언내용이나 그 후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의 홍보지 『금수강산』, 8월호의 주장 그리고 『통일신보』, 2006년 10월 14일 자의 내용 등을 참고.

4. 남북교역 및 북한경제에 대한 제가설들의 논리적 연관성

우리는 이 장의 도입부에서 남북교역과 관련된 여섯 가지의 가설을 적시하고, 그 가운데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이 가장 중심적인 가설이라고 말하였다. 그럼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경제평화론이나 경제무용론의 논리적 외연을 확장하면 쉽게 다른 가설로 나아갈 수 있는데 반해, 그 역의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평화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앞서 경제평화론의 핵심적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가 북한을 대외의존적 원조경제로 바라보는 원조경제론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세계 되면,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은 남북교역을 둘러싼 경제적 힘의 관계에서 한국에 열위이기 때문에 좋은 싫든 한국이 남북교역에 부과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응당 시장경제적 조건일 것이며, 기존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는 맞지 않거나 이를 변형시키는 것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역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곧 북한경제와 맞닿는 또는 북한경제에 침투하는 시장경제적 요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경제가 점차 시장경제와 가까워지거나 시장경제화 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트로이 목마론’으로 쉽게 연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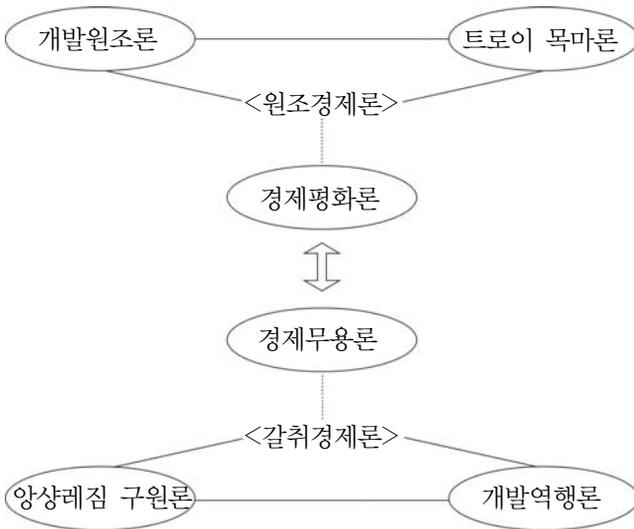
그런데 정반대로 경제무용론의 입장에 서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현재 스스로가 보유한 정치군사적 능력 등을 이용해 한국으로

부터의 거래와 지원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남북교역을 둘러싼 힘의 관계에서 열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편으로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거래와 지원을 끌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전자의 목적을 위해 북한은 남북교역과 관련해 한국이 요구하는 일정 정도의 시장경제적 요구를 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시장경제적 요구의 영향력이 대내의 사회주의 부문으로 전파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이며, 동시에 남북교역과 맞닿은 일부의 경제적 공간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과실을 모두 대내의 사회주의 경제부문에 돌려 이의 복구와 강화를 시도할 것이다. 만일 한국의 남북교역과 관련된 시장경제적 요구가 더욱 증대되어 대내의 사회주의 부문에까지 그 영향력이 파급될 지경에 이르면, 북한은 남북교역 자체를 레버리지로 한국의 요구를 길들이려 시도할 것이다. 남북교역이 증대할수록 한국이 북한에서 보유하는 경제적 자산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자산은 한국의 시장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과 같은 개별경제 주체들에게 더욱 분산될 것이다. 북한의 전체주의적 특성상 경제적 자산에 집중하는 이러한 분산된 주체들을 상대하기는 더욱 수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이 발전할수록 한국이 이를 매개로 북한에 시장경제적인 요구를 하기는 더욱 힘들어 질지도 모른다. 이는 결국 남북교역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시장경제적 영향력은 북한의 특정공간 또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 경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만약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강화가 이미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몰락한 북한의 구(舊)경제질서를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남북교역이 북한의 앙상레짐을 구원하는 응원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의 논리적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 그것은 남북교역을 둘러싼 여타의 가설들에 쉽게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림 IV-4>는 앞에서 언급한 남북교역에 대한 여섯 가지 가설들을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긍정적 가설들과 부정적 가설들로 크게 양분하고 있다.

<그림 IV-4> 여섯 가지 가설의 연관 구조



V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의 인과관계 검증

이제까지 우리는 남북교역과 북한경제에 대한 여러 가설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가설이 바로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이라는 사실과 이들 가설의 논리적 외연을 확장하면 다른 여타의 가설을 모두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만일 우리가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가설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만 있다면, 남북교역 및 북한경제와 관련된 모든 가설의 현실 적합성 여부 역시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 가설은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다른 대립적 견해를 표방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간의 남북교역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만 있다면, 이는 곧 남북교역과 북한경제와 관련된 모든 가설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가능한 경우 과연 어떻게 그와 같은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도록 한다. 이 장의 말미에서 분명히 하겠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여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논의를 풍부하고 생동감있게 발전하도록 만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1. 예비적 논의: 교역과 평화의 인과관계 검증에 대한 일반적 토론

경제적 교류와 정치적 갈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깊이 연구해 온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 많은 서구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교역과 정치적 갈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설명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들 모형들이 더욱 발전된 수리계량적 기법을 원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²⁵ 물론 이들 모형들이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모형은 경제적 교류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한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모형은 그 반대의 경우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모형 가운데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경험적이며 계량적인 모형들이다. 이들이 바로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 또는 증거에 근거해 교역과 정치적 갈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이다.²⁶ 만일 이들의 시도를 남북교역과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과 한반도의 평화 사이의 인

²⁵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는 예를 들어 *Journal of Peace Research*가 교역과 평화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기 위해 발행한 1999년의 특별판(special edition) Vol. 36, No. 4에 수록되어 있는 논의들을 참고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Solomon W. Polachek; John Robst; Yuan-Ching Chang, "Liberalism and Interdependence: Extending the Trade-Conflict Model,"; John R. Oneal; Bruce Russett, "Assessing the Liberal Peace with Alternative Specifications: Trade Still Reduces Conflict,"; Han Dorussen, "Balance of Power Revisited: A Multi-Country Model of Trade and Conflict,"; Katherine Barbieri; Jack S. Levy, "Sleeping with the Enemy: The Impact of War on Trade,"; James D. Morrow, "How Could Trade Affect Conflict?," 또한 이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라면 제3장의 '주 30'에 소개된 저술들을 참고.

²⁶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Reuveny and Kang, "Bilateral Trade and Political Conflict/Cooperation: Do Goods Matte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5, No. 5(1998) 및 이들이 서베이 하고 있는 경험적 연구들을 참고.

과관계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일 역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교역과 정치적 갈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와 관련된 두 가지의 난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하나는 교역이란 계량적으로 관찰 가능한 변수이지만, 정치적 갈등 또는 평화란 계량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두 변수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올바르게 검증할 수 있는 계량적 기법이 과연 존재하는가이다. 예를 들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양자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이러한 두 가지 난제를 아직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몇 가지의 가정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교역과 정치적 갈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얼마든지 계량적으로 토론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난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교역과는 달리 정치적 갈등 또는 평화의 정도(degree)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계량적인 수치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량적인 수치를 찾아내거나 만들어 내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실제로 그간 평화와 갈등의 정도를 계량적인 수치로 표현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해 왔는데, 이들 시도는 크게 두 가지의 아이디어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평화와 갈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제반 통계들을 모두 모아, 이들 각각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종합하여 평화와 갈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종합적 지표(indicator)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서 발간되는 연보(*SIPRI yearbook*)나 미국에서 구성되는 ‘민주적 평화시계(Democratic Peace Clock)’ 같은 지표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갈등이나 평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각의 사건(event)에 그 갈등의 정도를 나타내게끔 일정한 수치를 부여한 후, 이를 종합한 하나의 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²⁷이나 KEDS(Kansas Event Data System),²⁸ WEIS(World Events Interaction Survey)²⁹ 그리고 IPI(International Political Interactions)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³⁰ 물론 누구도 이러한 지표들이 평화와 갈등의 정도를 완벽히 나타내는 수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표의 구성 노력 자체에 회의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의 사용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평화와 갈등의 정도를 완전하지는

²⁷ Edward E Azar, *The Codebook of the Conflict and Peace Data Bank(CODAB): A Computer-Assisted Approach to Monitor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Events* (College Park, N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University of Maryland, 1982)

²⁸ <<http://www.ukans.edu/~keds/index.htm>>.

²⁹ Charles McClelland, *World Events Interaction Survey* (L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CPR 1972).

³⁰ <<http://garnet.acns.fsu.edu/~whmoore/ipi/codebook.htm>>.

않지만 일정한 기준 아래 장기간 추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계량적인 수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개선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개선된 기준 또는 수치를 만드는 일 역시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러한 기준 또는 지표들의 한계와 효용성을 모두 인정한다면, 이를 이용해 교역과 평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테스트 하는 일이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의 난제와 관련해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적인 사회적 현상들 사이의 인과성을 어떻게 수리계량적으로 표현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모든 수리계량적 방법은 완전하지 않고 나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역과 평화의 인과성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이른바 ‘그랜저 인과성(Granger Causality)’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다.³¹ 이 방법은 두 계량변수 사이에 나타나는 허위(spurious)적이고도 무의미한(meaningless) 상관관계(correlation)를 제거하고, 두 변수 사이의 순수한 인과적 관계만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방법은, 두 계량변수 x 와 y 가 존재할 경우, 이들 사이의 인과성 문제를 현재의 x 값(또는 y 값)을 설명하는 데 과거의 y 값(또는 x 값)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x 값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과거의 x 값뿐만 아니라 과거의 y 값을 설명변수에 삽입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도 더욱 많이 현재의 x 값을 설명한다면, y 는 x 를 ‘그랜저

³¹ C W J Granger, “Investigating casu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 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Vol. 37(1969), pp. 434~438.

초래(Granger cause)'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y 는 x 의 '그랜저'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랜저 인과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나는 허위적이고 무의미한 관계를 배제한다는 것과 ② 변수들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측정하고, ③ 한 변수와 관련된 정보가 다른 변수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설명하는가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연구자가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 현실의 교역과 평화사이의 인과성을 검증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연구자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량적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의 '그랜저 인과성' 개념을 토대로 교역과 평화사이의 인과성을 검증하는 일 역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과학이란 불완전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방법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그 불완전성을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방법으로 교역과 평화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적인 불완전성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는 이들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토론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과 평화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불완전성을 감내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이다.

2. 검증 모형 및 방법

앞서 지적한 방법론적인 불완전성은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려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그 검증을 시도한다. 동일한 시도가 국내외의 많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상을 향해 시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했을 경우보다 앞서 언급한 남북교역을 둘러싼 제반 가설의 발전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말미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해석과 관련된 주의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즉 앞으로의 논의는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은 방법론적인 불완전성으로 인해 그 결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보다 완전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적이며 논쟁적인 결론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의점을 염두에 두고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관계 검증을 시도해 보자.

가. 이용 데이터

우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쉬운 것부터 출발해 보자. 이 글에서 우리는 검증에 필요한 남북교역 통계로서 한국 통일부가 제공하는 교역통계를 이용한다. 남북교역을 총괄하는 한국의 정부기관이 통일부라는 점에서, 이러한 통계의 이용에는 별다른 이견

이 없을 것이다. 이들 통계 가운데 우리는 특히 세 가지의 변수, 또는 거래 내역에 집중할 것이다. 하나는 남북한의 총교역량이며, 다른 하나는 비상업적 거래량이고, 나머지 하나는 남북한의 일반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무역수지의 변화, 다시 말해 북한이 일반 무역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무역수지 흑자액의 규모이다. 이 가운데 총교역량과 비상업적 거래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총교역량은 남북교역의 전체적인 수준을 나타내며, 비상업적 거래량은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또는 원조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무역수지에 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의 제Ⅲ장에서 한국은 북한이 대외거래를 통해 경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북한은 이러한 경화를 바탕으로 중국 등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에 있어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변수의 하나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화의 총량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줄어들 경우 비단 남북교역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나라와의 대외거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이 경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채널은 일반교역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존재한다. 위탁가공교역이나 금강산 관광료,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임금지불 그리고 북한 방문자들의 직간접 지출비용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채널들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경화의 수량은 일반교역에서 보다도 매우 적는데 반해 기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정해 그 양을 정확히 집계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경화의 대표변수로서 일반

교역을 통한 무역수지 변화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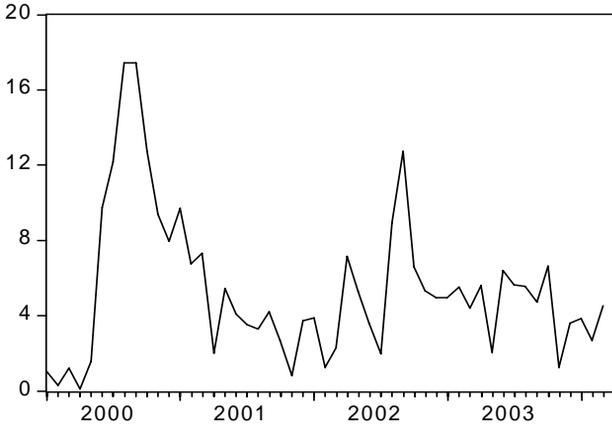
한편, 이 글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나타내는 대표 지수로 한양대학교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개발해 작성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지수(Korea Peace Index: KOPI)’를 이용한다. KOPI는 미국에서 개발된 COPDAB처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각종 사건(event)의 의미를 수치화함으로써 전반적 평화 또는 갈등의 수준을 나타내도록 설계된 지표이다. 남북한의 평상시 관계수준을 0, 완전한 통일상태를 100, 그리고 양국간의 전면전쟁 상태를 -100 등으로 각각 설정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날마다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수치를 부여한 다음, 이를 종합해 한반도 평화 수준을 나타내는 일일 지수를 작성하는 것이다. KOPI는 남북한 관계가 전환기를 맞은 2000년 1월 1일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KOPI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KOPI는 한반도의 평화수준을 계량화하여 표현해 보려는 거의 유일한 체계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검증 모형 및 방법

여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통계자료들을 월별 자료의 형태로 재정리하여 2000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를 대상으로 검증을 시도한다. KOPI의 경우에는 일별 자료가 존재하지만 남북교역 통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연간 자료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시계열이 너무 짧아진다는 점에서, 이 두 자

료를 모두 월별로 재정리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V-1>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2000년 1월~2004년 4월



실질적인 추정에 앞서 우리는 월별 남북교역 통계 및 KOPI를 대상으로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과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을 수행하였다. 밑에서 살펴보듯이, 남북교역 및 한반도 평화 사이의 그랜저 인과성 검증은 그 자체가 회귀모델을 이용하는 점에서, 여기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정상성(stationarity)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검증의 결과 양 데이터의 원 시계열이 아니라 그것의 일차 차분(first differencing) 시계열이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추정은 이러한 일차 차분 시계열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항 자기회귀모형(bivariate autoregressive model)이 상정되었다.

$$KOPI_t = a + \sum_{i=1}^p \alpha_i KOPI_{t-i} + \sum_{j=1}^q \beta_j ECO_{t-j} + \mu_t \quad (1)$$

$$ECO_t = a + \sum_{i=1}^r \gamma_i ECO_{t-i} + \sum_{j=1}^s \delta_j ECO_{t-j} + \nu_t \quad (2)$$

여기에서 KOPI는 한반도 평화지수를 의미하고, ECO는 남북교역 관련 변수 즉, 총교역량과 비상업적 거래량 그리고 일반무역을 통한 무역수지 변동액을 나타낸다. μ_t 와 ν_t 는 시계열적으로 독립적인 백색 노이즈(white-noise)를 나타내며, p, q, r, s는 시차(lag lengths)를, 그리고 a는 상수(constant)를 각각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에서 이항 모형이 설정되는 것은 검증되는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방향(one-way)일수도 있지만 양방향(two-way)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에 ‘남북교역 → 한반도 평화’라는 인과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 남북교역’ 또는 ‘남북교역 ↔ 한반도 평화’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처럼 이항 자기회귀모형이 설정된 것이다.

위의 식 (1)과 (2)는 OLS(Ordinary Least Squares)에 의해 추정되었으며, 그랜저 인과성의 존재 유무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 각 식의 동일 시차에서 F-통계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의 F-통계량은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을 대상으로 산출된 것이다.

$$\beta_1 = \beta_2 = \beta_3 \dots = \beta_k = 0 \quad (1-1)$$

$$\delta_1 = \delta_2 = \delta_3 \dots = \delta_k = 0 \quad (2-1)$$

다시 말해, (1)과 (2)식에서 ‘한반도 평화/남북교역은 남북교역/한반도 평화를 그랜저 초래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대상으로 한 F-통계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그랜저 인과성의 판단은 이러한 귀무가설이 통계적으로 기각되는가, 또는 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 검증 결과 및 토론

가. 검증 결과

<표 V-1>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의 경우는 남북교역 통계량으로서 총교역량을 이용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 남북교역량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에 아무런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역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관찰되었다. 즉, 과거 변수의 시차를 2개월이나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가 남북교역량의 변화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역시 과

거 변수의 시차를 달리하면 사라졌다.

둘째는 남북교역 통계량으로서 비상업적 교역량을 이용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에는 남북교역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북한이 일반교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경화의 수량을 남북교역 통계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였다. 이때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우선 과거 변수의 시차를 1개월로 설정할 경우, 남북교역의 변화, 즉 북한이 일반교역으로 벌어들이는 경화의 규모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에 인과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경제평화론에서 주장하는 ‘남북교역 → 한반도 평화’라는 채널이 처음으로 관찰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적 관계는 과거 변수의 시차를 달리할 경우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한반도 평화 → 남북교역’이라는 역의 인과관계 역시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변수의 시차를 2개월이나 3개월로 설정할 경우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가 남북교역의 변화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어떤 일의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었다. 우선 남북교역이 한반도 평화에 인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가설은 기술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특수한 조건에서만 관찰되었다. 남북교역량의 통계로 북한이 일반교역에서 획득하는 경화의 규모를 사용하고, 과거의 시차 역시 1개월로 한정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이러한 가설이 부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이 한

반도 평화에 인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에, 또한 그렇지 않다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표 V-1>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 2000년 1월~2004년 4월

ECO 변수	시차 (개월)	F-Statistics		인과관계
		KOPI eq.(1)	ECO eq.(2)	
총교역량	1	0.077 (0.782)	0.005 (0.943)	ECO ... KOPI
	2	1.041 (0.361)	2.446 (0.098)	ECO ← KOPI
	3	0.775 (0.514)	2.505 (0.072)	ECO ← KOPI
대북지원	1	0.003 (0.952)	0.120 (0.730)	ECO ... KOPI
	2	0.039 (0.961)	0.690 (0.507)	ECO ... KOPI
	3	0.031 (0.992)	0.527 (0.666)	ECO ... KOPI
북한의 흑자규모	1	3.223 (0.079)	0.270 (0.605)	ECO → KOPI
	2	1.831 (0.172)	3.211 (0.051)	ECO ← KOPI
	3	0.893 (0.452)	1.961 (0.135)	ECO ... KOPI

주: ()는 P-값

이러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앞서와 같은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다시 한 번 실시하기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기에 두 가지의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였다. 우선 검증 대상이 되는 시기를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2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양분하여 각각의 세부 시기에 대해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한데, 제2차 북한 핵문제라는 외부의 돌발변수로 인해 한반도 평화수준을 나타내는 KOPI 지수가 이를 전후해 구조적인 차이(structural break)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남북교역에 이용되는 통계량으로 북한이 일반교역에서 획득하는 경화, 즉 남북교역에서의 북한의

무역수지 흑자액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 역시도 분명한데, 이는 앞서의 인과관계 검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남북교역 → 한반도 평화’라는 인과관계 채널이 비록 제한적이거나 나타난 유일한 사례가 바로 남북교역 통계량으로서 북한의 무역수지 흑자액을 이용한 경우였기 때문이었다.

<표 V-2>는 이처럼 실시된 두 번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우선 북한 핵문제가 발발하기 이전인 20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한국과의 일반교역에서의) 무역수지 흑자규모와 한반도 평화수준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북한의) 무역수지 흑자 → 한반도 평화’라는 인과관계 채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과관계 채널은 95%의 통계적 신뢰수준에서, 과거의 시차 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나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 사이에는 북한의 무역수지 흑자라는 변수로 대별되는 남북교역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수준을 매우 분명하게 ‘그랜저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제2차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2002년 10월 이후에는 매우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된 그랜저 검증에서는 ‘북한의 무역수지 흑자 → 한반도 평화’라는 인과관계 채널이 오직 90%의 통계적 신뢰수준에서만 일부 관찰되었고, 이 역시 과거의 시차를 변화시킬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 사이에 성립했던 ‘(북한의) 무역수지 흑자 → 한반도 평화’라는 인과관계가 2002년 10월부터는 매우 약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당연하지만 이는 2000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전 기간

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에서 ‘(북한의) 무역수지 흑자 → 한반도 평화’라는 인과관계 채널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나타났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즉 2002년 10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매우 분명했던 이러한 인과관계 채널의 존재가 그 이후에는 매우 미약해졌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의 결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토론하기 위해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1] 남북교역 총량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가 남북교역의 총량변화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 채널 역시 매우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2] 한국의 비상업적 대북거래 규모와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3] 북한이 한국과의 일반교역에서 획득하는 무역수지 흑자액의 규모는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이러한 인과적 영향력은 2002년 10월 제2차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기 이전 시기에 매우 뚜렷한 것으로 관찰된다.
- [4] 앞의 [3]에서 관찰된 인과적 영향력은 2002년 10월 제2차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매우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2000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전 기간

을 대상으로 보면, ‘(북한의 무역수지 흑자라는) 남북교역 → 한반도 평화’의 인과관계 역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V-2> 북한의 무역흑자 규모와 한반도 평화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시차	2000년 1월~2002년 10월			2002년 11월~2004년 4월		
	KOPI eq.(1)	ECO (북한흑자) eq.(2)	인과관계	KOPI eq.(1)	ECO (북한흑자) eq.(2)	인과관계
1	7.057 (0.012)	5.072 (0.032)	ECO ⇔ KOPI	4.474 (0.052)	1.397 (0.284)	ECO → KOPI
2	7.827 (0.000)	2.783 (0.080)	ECO ⇒ KOPI	3.449 (0.065)	1.397 (0.284)	ECO → KOPI
3	4.433 (0.013)	1.536 (0.231)	ECO ⇒ KOPI	1.450 (0.286)	1.588 (0.253)	ECO KOPI
4	3.171 (0.035)	0.895 (0.484)	ECO ⇒ KOPI	1.053 (0.438)	1.373 (0.324)	ECO KOPI
5	2.964 (0.041)	0.602 (0.698)	ECO ⇒ KOPI	0.991 (0.493)	0.853 (0.559)	ECO KOPI

주: ()는 P-값

나. 토론

그럼 앞서와 같은 결과는 ‘남북교역 → 한반도 평화’라는 인과적 관계를 강조하는 경제평화론과 이를 비판하는 경제무용론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을 지지하는 것일까? 흥미롭게도 그 대답은 (현재로서는) ‘양자 모두’라는 다소 어정쩡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선 위의 결과를 경제평화론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자. 경제평화론은 남북교역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비로소 나타난다고 본다. 남북교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걸친 양국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의 부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

다. 따라서 위의 결과 [1]처럼 남북간의 교역총량이 일정 기간동안 한반도의 평화수준에 별다른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경제평화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위의 결과 [2]처럼 남북간의 비상업적 거래가 한반도의 평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매우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KEDO나 인도적 지원과 같은 남북간의 비상업적 거래는 ‘이미 합의된’ 일정에 따라 그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에는 별다른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위의 결과 [3]은 경제평화론의 기본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남북교역의 일정 형태에 실제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가 바로 위의 결과 [3]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위의 결과 [4]를 고려할 때에도 전혀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해, 2002년 10월 촉발된 제2차 북한 핵문제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특히 그간의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을 보면,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적 정책을 한국이 중간에서 조정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위의 결과 [4]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양자적 관계를 토대로 개발된 경제평화론을 부정하는 증거이기 보다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욱 타당할지도 모른다. 경제평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남북교역의 증대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수준 역시 점진적으로 호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실제로 그 초기에

는 이러한 호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이러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지속되기 힘들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들을 경제무용론 또는 경제위협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의미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위의 결과 [1]과 [2]는 남북교역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경제평화론의 기본 주장을 실증적으로 부정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 [3] 역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북한당국이 남북교역에 흥미를 보이는 이유는 이를 통한 재화의 수입 때문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경화의 획득, 즉 달러의 수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교역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북한경제의 재건이나 주민들의 후생증진을 위한 재화의 입수를 위한 통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당국이 필요로 하는 경화를 획득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만일 북한당국이 남북교역을 통해 더 많은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획득한 경화의 가치 또는 필요성이 예전만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남북교역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의 행위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능성은 위의 결과 [4]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결과 [3]과 [4]를 결합하여 보면, 그것은 북한당국이 2000~2002년 남북한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결과 남북교역의 확대로 획득한 경화를 비롯한 물질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2년 10월 이후 불거진 본격적인 핵문제의 대응에 나섰다고 보는 일종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해석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타당성이 있을까? 불행하게도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어떤 특별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들 두 가지 다른 해석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4. 검증의 한계와 의의

이제까지 우리는 교역과 평화의 일반론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앞의 논의에서도 분명히 했듯이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일은 방법론적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역시 어떤 일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확정적(conclusive)인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처럼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결과 역시 비확정적인(inconclusive) 논의를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굳이 시도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시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제까지 남북교역과 관련된 제반 논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학술적 영역에서는 엄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논쟁은 정치적인 차원이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주장이나 견해들은 많이 표방 되었지만, 이들 견해와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풍부히 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과 관련된 논쟁은 서로의 다른 시각을 긍정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되었다기 보다는, 각기 다른 주장 사이의 이념적 대립만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그간의 남북교역과 이를 뒷받침해 온 우리정부의 평화변영 정책의 공과를 둘러싸고 여론이 양분되고, 정치적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모든 사회적 논쟁과 이견이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교역처럼 한국과 북한 주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끝없는 대립과 소모적인 논쟁의 볼모가 되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들 논쟁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각의 논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이의 경험적 적합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남북교역을 대상으로 한 논쟁들이 학문적 토론의 영역으로 들어와 이야기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학문적 토론의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은 그것이 근거한 경험적 사실의 내용을 적시하고, 그것의 내용뿐 아니라 그 한계 역시 분명히 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다 발전된 내용이 만들어질 여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간의 남북교역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험적 사실과 방법에 기초한 토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탐색하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장에서, 비록 불완전한 방법에 기초하고 그 결과 역시 불확정적이지만,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려 시도한 것은 남북교역을 둘러싼 제반 논쟁과 관련하여서도 경험적 사실과 방법에 기초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의 예로써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방법과 사실들에 기초하여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논의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만이 남북교역을 둘러싼 현재의 대립적인 논쟁들을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관련되는 사실이나 경험적 증거들을 찾아내어 확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한 가지 부정적인 결과는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너무나 적은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격렬히 대립할 때에도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논쟁을 해소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차원의 논쟁으로 승화시키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일 남북교역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와 관련하여 또 다른 새로운 주장을 만들기 보다는 그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을 찾으려 시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 불완전하고도 불확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통해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평가하고자 시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VI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는 이 글에서 북한경제와 남북교역에 관련된 두 가지의 기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자 시도하였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간 한국이 남북교역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자 시도해 온 노력은 과연 실패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들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북한경제 분석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라 할 수 있는 북한의 GDP 및 무역 규모 관련 통계로는 비록 다양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북한경제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기법과 자료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볼 때, 북한의 GDP 규모와 관련해서는 UN통계국의 추정치와 북한의 공식통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북한의 무역 규모와 관련해서는 KOTRA가 제공하는 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들 추정치 역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각 연구자들이 이들에 대해 일정한 수정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둘째, 현재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는 GDP 대비 25%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수치는 1990년대 북한이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보다는 상승한 것이지만 과거 북한경제가 상대적

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1970~1980년대의 수치와 비교해서는 크게 높아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북한경제는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대외의존적 또는 원조의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① 북한 대외거래의 적자 규모는 2000년 이후 GDP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적이며 구조적인 것으로써 그 추세 역시 증가하고 있다. ② 북한의 거의 모든 산업이 해외로부터의 (순)물자유입이 없으면 유지·발전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③ 북한의 대외거래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 2/3 정도나 집중됨으로써 대외거래의 성격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 ④ 북한이 지불부담을 지지않는 비결제성 거래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물자의 규모가 2000년 이후 GDP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물자를 광의의 해외원조 또는 지원이라고 해석한다면, 현재 북한경제는 대외의존적이라기 보다는 원조의존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이다.

셋째, 현재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해외 파트너는 한국과 중국이다. 한국은 북한이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이러한 흑자의 규모는 2002년 이후 연간 약 2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달러를 기초로 중국이나 기타 국가와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그 거래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물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2002년 이후 연간 3억 달러를 능가하는 비결제성 대북거래를 수행함으로써, 동일한 규모만큼의 물자를 북한의 지불부담 없이 제

공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이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2005년의 경우 20~26%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최대 거래 파트너로서 2003년 이후 북한 전체 대외거래의 약 33~39%를 점유하는 국가이다. 더욱이 중국은 석유와 같은 북한의 전략물자와 북한 주민들에 의한 시장 무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판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는 현재의 북한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나라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넷째, 그간 북한경제 및 남북교역의 효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과 가설이 제출되었는데 그것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남북교역의 증대가 과연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라는 쟁점과 이에 대한 긍정적 가설로서의 ‘경제평화론’ 및 부정적 가설로서의 ‘경제무용론’ 또는 ‘경제위협론’, ②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같은 변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라는 쟁점과 이에 대한 긍정적 가설로서의 ‘트로이 목마론’ 및 부정적 가설로서의 ‘양상레짐 구원론’, ③ 남북교역이 북한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쟁점과 이에 대한 긍정적 가설로서의 ‘개발지원론’ 및 부정적 가설로서의 ‘개발무익론’이다.

다섯째, 이러한 쟁점과 가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쟁점과 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가설로서의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가설들이 세간의 ‘퍼주기’ 논쟁과 같은 격렬한 대립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는 현실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들 가설들의 논리적 구조를 확장하면 다른 쟁점들

및 그에 따른 다른 가설들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경제 및 남북교역을 둘러싼 모든 쟁점과 가설을 평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들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의 현실 적합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기법 및 데이터의 한계를 인정한 채, 남북교역과 한반도 평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남북교역 총량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한국의 비상업적 대북거래 규모와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북한이 한국과의 일반교역에서 획득하는 무역수지 흑자액의 규모는 한반도 평화수준의 변화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인과적 영향력은 2002년 10월 제2차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기 이전 시기에는 뚜렷했으나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일곱째, 위와 같은 인과관계 검증은 ‘경제평화론’과 ‘경제무용론’ 모두에게 나름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불확정적(inconclusive)인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불완전한 방법을 통해 불확실한 결과를 생산하는 검증 시도를 굳이 강행하는 것은 그간 남북교역을 둘러싼 우리의 논쟁이 한 차원 높은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데이터에 근거한 경험적 논의들을 보다 많이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연구자의 표현처럼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사회의 대북정책 또는 시각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존에

당연시 되거나, 당위적으로 인식되는 것들, 논란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예 논란의 소지가 없었던 모든 것들에서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남북관계와 같이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서 끝없는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논쟁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간 알고 있다고 여기던 것들,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그 근원에서부터 천천히 곱씹어 볼 수 있는 뜻하지 않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남북교역과 북한의 대외거래라는 주제를 약간은 기술적인 측면을 곁들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동원한 방법은 완전하지도 않았으며, 그 결과 역시 확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도 아니었다. 이처럼 지리하고 조금은 이상하기까지 보이는 작업을 힘들게 수행한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이미 분열되기 시작한 우리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을 처음부터 다시금 천천히 살펴봄으로써 보다 발전된 형태의 논의를 만들기 위한 밑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보다 분열되고 대립되기 보다는 보다 통합되고 전진하는 형태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통계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데이터베이스
한국 통계청의 북한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통계 데이터베이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통계 데이터베이스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통계 데이터베이스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통계 데이터베이스
UNOCHA의 Financial Tracking Database
World Bank 통계 데이터베이스(World Development Indicator) 등

2. 문헌자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6.
김영운.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리진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 농업로동보수제에 관한 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 6. 26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박영호. 『농촌테제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이룩된 위대한 전변』. 평양: 농업출판사, 1994.
신동완 외. 『북한의 농업기술』. 서울: 오성출판사, 1998.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 서울대 출판사, 2001.

- 이 석. “198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식량위기의 기원.”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 2004.
- _____. “1994~2000년 북한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
- _____. 『북한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이 석·박청문·송은주. 『국제기구 등의 북한여성 및 어린이 건강상태에 관한 보고서 모음집(1998~2004)』. 통일연구원 내부 편찬 자료. 2005.
- 이영훈.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금융경제연구』. 2004. 11.
- 이종운.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과제.” 『KIEP 세계경제』. 2003. 5.
- 이 양. “북한의 GNP 추계방법 신방법의 개발과 기존방법의 비교.” 『공산권 경제동향』. 제1권 제3호, 1981.
- _____. “북한의 GNP 계산방법.” 『북한』. 1981.
- 전홍택. “실물지표에 의한 북한의 GNP 추정.” 『한국개발연구』. 제14권 1호, 1992.
- 정상훈. “북한경제연구: 일련의 방법적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5권 2호, 1989년 가을호.
- 정하청·이봉석. “북한경제총량추정에 관한 소고.” 『한국개발연구』. 제6권 제3호, 1984년 가을호.
- 조 민. “평화경제론.”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 『2002년 재생산건강조사보고서』. 2004.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각 호.
- 최신립. 『북한의 무역구조』. 서울: 산업연구원, 1991.
-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 비교』. 대전: 통계청, 각년도.
- Arad, Ruth W., Seev Hirsch and Alfred Tovia. *The Economics of Peacemaking: A Focus on the Egyptian Israeli Situation*. New York: St Martin's, 1983.
- Ashley, Richard.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and Peace: The Sino Soviet American Triangle and the Modern Security*

- Problematique*. London: Frances Pinter, 1980.
- Aslund, Ander. "How Small Is Soviet National Income?." In H. S. Rowen and Charles Wolf, Jr. eds. *The Impoverished Super Power*.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1990.
- Barbieri, K. and Schneider G.. "Globalization and peace: Assessing New Directions of the Study in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6, No. 4, 1999.
- Beal, Tim. "The Crisis in North Korea: Seeds of Hope." Working Paper, The Asian Studies Institute of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1999.
- Bergson, Abram. *The National Income of Soviet Russia Since 1928*.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1.
- _____. "Comparative Productivity: The USSR, Eastern Europe, and the Wes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 3, 1987.
- Brun, E. and J. Herch. *Socialist Kore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7.
-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 D. Thesis. Northeastern University USA, 1992.
- Choucri, Nazli and Robert North. *Nations in Conflict: National Growth and International Violence*. San Francisco, CA: Freeman, 1975.
- Chun, Hong Tack. "Economic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Prospects for Reform."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eds. by T. H. Henriksen and J. Mo..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7.
-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24 Jun. 2002-a.
- _____.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Second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s of 16 and 17 of the Covenant,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9 April 2002-b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DPRK, 1995.

_____.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November 2002.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eneva, 28~29 May 1998.

Easterly, William and Stanley Fischer. "The Soviet Economic Decline."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9, No. 3, September 1995.

Eberstadt, Nicholas. "North Korea as an Economy Under Multiple Severe Stresses." *Communist Economies and Economic Transformatio*. June 1997.

_____. "North Korea's Interlocked Economic Crisis." *Asian Survey*. March 1998.

Eberstadt, Nicholas and Banister Judith.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Korea Research Book, 1992.

Eva, Ehrlich. "Economic Development, Levels, Proportions and Structures." Working Pap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World Economy,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May 1985.

Gasiorowski, Mark J. and Solomon W. Polachek. "Conflict and Interdependence: East West Trade and Linkages in the Era of Détent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6(4). 1982.

Erich and Marilyn Weingartner. "Is Aid the Answer?." The 1999 Dorothy & David Lam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Victoria, British Columbia, 1999.

Feld, Warner. "Global Allies or Competitors: US Policy Toward an Ascendant European Community and Japan." In Charles E. Kegley Jr and Pat McGowan. eds. *Challenges to America: US Foreign Policy in the 1980s*. Beverly Hill, CA: Sage, 1979.

Gomulka, S. and M. Schaffer. "A new method of long run growth

- accounting, with application to the soviet economy 1928~87 and the US economy 1949~78.” Papers 14. LSE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1991.
- Haggard, S. and M. Norland. *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for North Korea, 2005.
- Holzmann, Rovert. “Budgetary Subsidies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n Transition.” IMF Working Paper, 1991. 11.
- Jin, Jang. “Openness and Growth in North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1, No. 1, 2003.
- Joglekar, Gitanjali and Andrew Zimbalist. “Dollar GDP per Capita in Cub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3. 1989.
- Kim, Lee and Sumner. “Assessing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6. No. 3, 1998.
-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Annual Report*. Various Years.
-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 D. Thesis. University of Warwick, 2003.
- Lim, Gang Taek. *North Korean Foreign Trade, 1962~1992*. Ph. D. Thesis. University of New York, 1995.
- Manyin and Jun.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RL31785*. March 2003.
- Marer, Paul. *Dollar GNPs of the USSR and Eastern Europe*. Baltimore: A World Bank Public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 Moroney, John R. “Energy Consumption, Capital and Real Output: A Comparison of Market and Planned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4. 1990.
- Niwa, Haruki and Fuji Goto. “Estimates of the North Korean Gross Domestic Product Account 1956~1959.” *Asian Economic*

- Journal*. March 1989.
- Noland, M. "Prospects for a North Korean External Economic Opening."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In T. H. Henriksen and J. Mo. eds.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7.
- Noland, M. "Why North Korea Will Muddle Through." *FOREIGN AFFAIRS*. Vol. 76, 1997.
- Noland, M., S. Robinson and L. Liu. *The Economics of Korean Unific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97~5. 1997.
- Noland, M., S. Robinson and T. Wang. "Rigorous Speculation: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99~1. 1999.
- Polachek, Solomon W.. "Dyadic Dispute: An Economic Perspective." *Peace Science Society (International) Paper 28(1)*. 1978.
- _____.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of Resolution 24(1)*. 1980.
- _____. "Conflict and Trade: An Economics Approach to Politic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In Walter Isard and Charles Anderton. eds. *Economics of Arms Reduction and the Peace Process*. Amsterdam: Elsevier Science, 1992.
- Polachek, Solomon W. and Judith A. McDonald. "Strategic Trade and the Incentive for Cooperation." In Manas Chatterji and Linda Rennie Forcey. eds. *Disarmament, Economic Conversion, and Management of Peace*. Westport, CT: Praeger, 1992.
- Reuveny and Kang. "Bilateral Trade and Political Conflict/Cooperation: Do Goods Matte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5, No. 5, 1998.
- Smith, Heather.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Stasis or Reform?." Brookings Discussion Papers in *International Economics 133*. 1997.
- World Food Program. Nutrition Survey of the DPRK. November 1998.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 · 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 · 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 · 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 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 정세 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 정책연구 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